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5차 위원회 －

2025. 5. 19.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1. 개 요

□ 일 시 : '25. 05. 19.(월), 15시~17시

□ 장 소 : aT센터 창조룸 I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언론사,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

□ 심의 및 보고안건

- (심의 1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향
- (보고 4건) ① 2025 농어촌 삶의질 지수 공표, ② 경상지역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조치사항 보고, ③ 농어업위- 삶의질위 통합 추진상황, ④ 의결안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성과

\* 안건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2. 세부 일정(안)

| 일 정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15:00~15:05 ( 5') | ○ 안내 및 국민의례                                | 총괄기획팀장           |
| 15:05~15:15 (10') | ○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                  |
| 15:15~15:17 ( 2') | ○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
| 15:17~15:20 ( 3') |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 위원장              |
| 15:20~15:50 (30') | ○ 특별 주제 발표<br>-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 혁신사업 추진 | 고무현상무            |
| 15:50~16:50 (60') | ○ 안건 심의·보고 5건                              | 분과 및 특위장<br>사무국장 |
| 16:50~17:00 (10') |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 위원장              |

※ 회의 종료 후 만찬 진행,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원장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장 | 태 | 평 |
|-----|-------------------|---|---|---|
| 위 원 | 기획재정부장관           | 공 |   | 석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 | 미 | 령 |
|     | 해양수산부장관           | 강 | 도 | 형 |
|     | 국무조정실장            | 방 | 기 | 선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오 | 유 | 경 |
|     | 농협중앙회장            | 강 | 호 | 동 |
|     | 산림조합중앙회장          | 최 | 창 | 호 |
|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최 | 홍 | 식 |
|     |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이 | 승 | 호 |
|     | 前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 이 | 숙 | 원 |
|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 노 | 만 | 호 |
|     |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 김 | 태 | 훈 |
|     | 한국수산회 회장          | 정 | 영 | 훈 |
|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 안 | 창 | 희 |
|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 박 | 정 | 희 |
|     | 前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 김 | 기 | 명 |
|     | 前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 박 | 다 | 정 |
|     |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학장   | 김 | 민 | 경 |
|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김 | 용 | 하 |
|     |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김 | 종 | 덕 |
|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 김 | 창 | 길 |
|     |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 김 | 태 | 호 |
|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김 | 한 | 호 |
|     | 前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류 | 방 | 란 |
|     |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문 | 병 | 완 |
|     |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 우 | 수 | 영 |
|     |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 이 | 기 | 원 |
|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 장 | 판 | 식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한 | 두 | 봉 |



## 목 차

|                      |   |
|----------------------|---|
| ○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 | 1 |
|----------------------|---|

### 〈주제 발표〉

|                                  |   |
|----------------------------------|---|
| ○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물 혁신사업 추진 .. | 5 |
|----------------------------------|---|

### 〈심의 안건〉

|                               |    |
|-------------------------------|----|
| ○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 · | 31 |
|-------------------------------|----|

### 〈보고 안건〉

|                             |    |
|-----------------------------|----|
|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 53 |
|-----------------------------|----|

|                                                     |    |
|-----------------------------------------------------|----|
| ○ 경상지역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방안<br>마련을 위한 위원회 조치사항 보고 ..... | 83 |
|-----------------------------------------------------|----|

|                           |    |
|---------------------------|----|
| ○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추진상황 ..... | 89 |
|---------------------------|----|

|                            |     |
|----------------------------|-----|
| ○ 의결안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성과 ..... | 103 |
|----------------------------|-----|



제 25 차 위 원 회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       |                                                                                                          |
|-------|----------------------------------------------------------------------------------------------------------|
| 회 의 명 | 제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 주관기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 개최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14:00 ~ 17:00                                                                            |
| 개최방식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창조룸 I / 대면회의                                                                      |
| 참석명단  | 위원장 : 재직 1명, <u>참석 1명</u><br>당연직위원 : 재직 5명, <u>참석 2명</u><br>위촉직위원 : 재직 24명, <u>참석 16명</u><br>(참고) 참석자 명단 |

### 진행순서

1. 전 차 회의 결과 보고(서면)
2. 특별 주제 발표("첨단식품산업 및 바이오팜 특화전략")
4. 안건 심의 및 보고
5. 폐회

### 상정안건

1. (심의)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2. (심의)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3. (심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개선방안
4. (심의)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 확대방안
5. (심의)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6. (보고)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7. (보고) 2025년 농어업위 주요업무계획

### < 결정사항 >

1. (심의)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원안 의결**
2. (심의)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 **원안 의결**
3. (심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개선방안 : **원안 의결**
4. (심의)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 확대방안 : **원안 의결**
5. (심의)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 **원안 의결**
6. (보고)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원안 접수**
7. (보고) 2025년 농어업위 주요업무계획 : **원안 접수**



제 25 차 위 원 회

## 주 제 발 표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  
혁신사업 추진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 혁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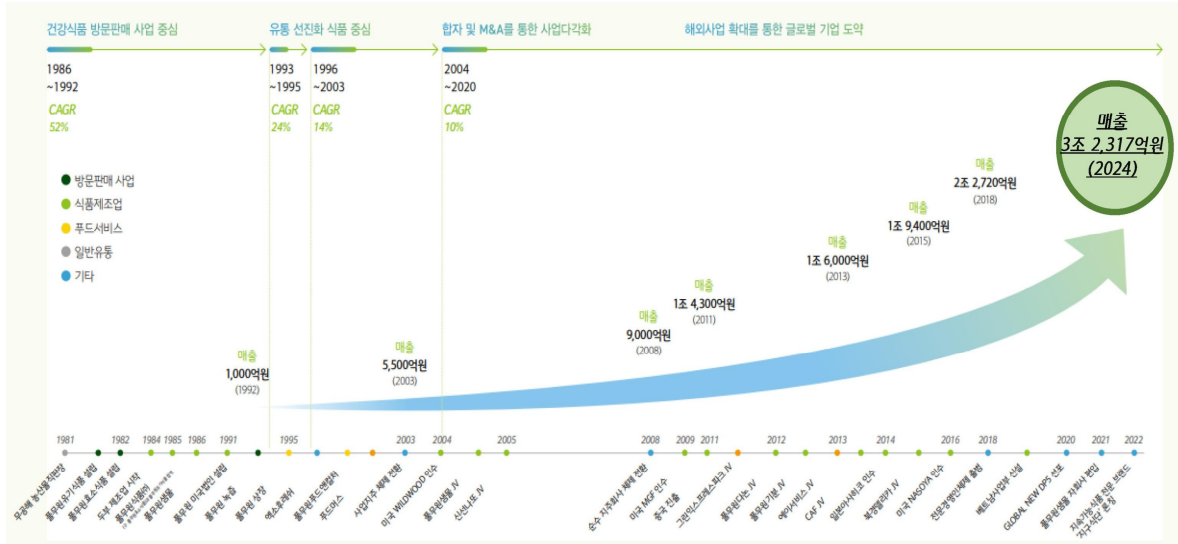
주식회사 풀무원  
고무현 | 상무  
2025. 05. 19.

## CONTENTS

- I. (주)풀무원 소개
- II.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III. 혁신사업 - 동물복지 축산
- IV.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주)풀무원 -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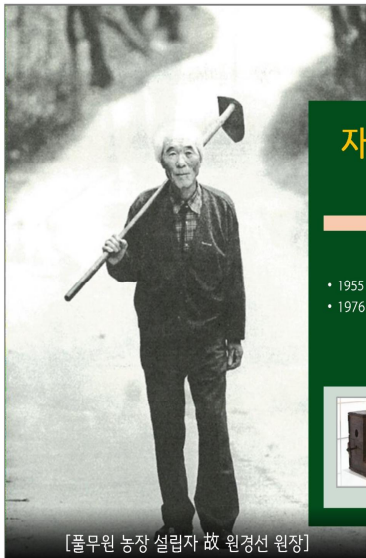
- 1981년 한국 최초 유기농 가게를 시작으로, 1984년 5월 12일 '풀무원식품(주)'을 설립하여 '이웃사랑',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
- 2024년 글로벌 매출 3조 2,317억원 달성, 글로벌 No 1 Sustainable foods 기업



2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1. (주)풀무원 - History

- 바른먹거리 기업으로 알려진 풀무원의 시작은 1955년 풀무원 농장을 설립, 운영하신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故원경선 원장으로 부터 시작



###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실현해 나가는 바른먹거리 기업

#### 풀무원의 대동

##### 풀무원 농장

- 1955 '풀무원 농장/공동체' 설립
- 1976 유기농농민단체 '경농회' 결성

#### 풀무원의 시작

##### 풀무원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 1981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설립
- 1984 '풀무원식품' 창사
- 1993 '지구사랑기금' 조성 시작

#### 풀무원의 성장

##### 바른먹거리

- 2012 '풀무원재단' 공식 출범
- 2018 전문경영인체제 출범
- 2018 연매출 2.2조원 달성
- 2019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 확립

#### 풀무원의 현재

- 2022 지구식단 브랜드 론칭



#### [풀무원 명칭의 유래]

풀무: 대장간 화덕에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 → 낡은 연장이 풀무질을 통해 유용한 농기구로 재탄생

▶ [풀무+원(園)]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풀무질하는 터전

3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1. (주)풀무원 - 주요 사업 영역

- 바른먹거리에서 시작된 풀무원의 사업은 식생활과 식문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생활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 풀무원 주요 법인(계열사) 사업 영역

| 구분        | CI                                                                                            | 사업 영역                                         |
|-----------|-----------------------------------------------------------------------------------------------|-----------------------------------------------|
| 풀무원식품     | <br>풀무원식품    | 두부, 나물, 생면, 냉동밥 등의 제조, 판매 및 냉장·냉동·상온 물류서비스 제공 |
| 푸드머스      | <br>풀무원푸드머스  | 급식, 외식, 원재료 시장 식재료 공급                         |
| 풀무원 건강생활  | <br>풀무원건강생활  | 건강기능식품, 스낵케어, 주방요리가전, 건강생활가전, 반려동물 먹거리 판매     |
| 풀무원 푸드엔컬처 | <br>풀무원푸드엔컬처 | 급식, 휴게소 등에서 식음료 조리 및 제공 서비스, 필요 상품과 편의 서비스 제공 |

| 구분    | CI                                                                                                        | 사업 영역                          |
|-------|-----------------------------------------------------------------------------------------------------------|--------------------------------|
| 풀무원다논 | <br>풀무원다논               | 발효유 제품 제조 및 판매                 |
| 풀무원샘물 | <br>풀무원샘물               |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                  |
| 풀무원녹즙 | <br>풀무원녹즙               | 기능성 음료, 유아식, 성인식 제조 및 판매       |
| 올가홀푸드 | <br>ORGA<br>WHOLE FOODS | 직영 및 가맹 매장을 통한 친환경 식품과 생활용품 판매 |

- 글로벌 사업 범위



4 Copyright 2025 Pulmuo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 1. (주)풀무원 - 핵심전략

- 풀무원은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alue Chain 전 과정을 혁신하여 사람, 동물, 환경에 보다 이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합니다.
- 지속가능 사업을 위해 4가지 핵심전략을 수립,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webzine.seoulmetro.co.kr/>)

01

### Plant Forward

식물성지향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식물성 원료를 지향하고 동물성 원료 사용을 줄이는 제품/식단

02

### Animal Welfare

동물복지



건강한 사육환경에서 생산하고 생태계의 지속적인 순환에 기여하는 동물복지 식재

03

### Healthy Experience

건강한경험



건강한 식생활을 원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디자인 푸드와 큐레이션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여정 속 Pain Point 해결하는 특별한 고객 경험 서비스를 제공

04

### Eco-Caring

친환경케어



원료, 제조, 판매/포장, 폐기 등 Business Value Chain 전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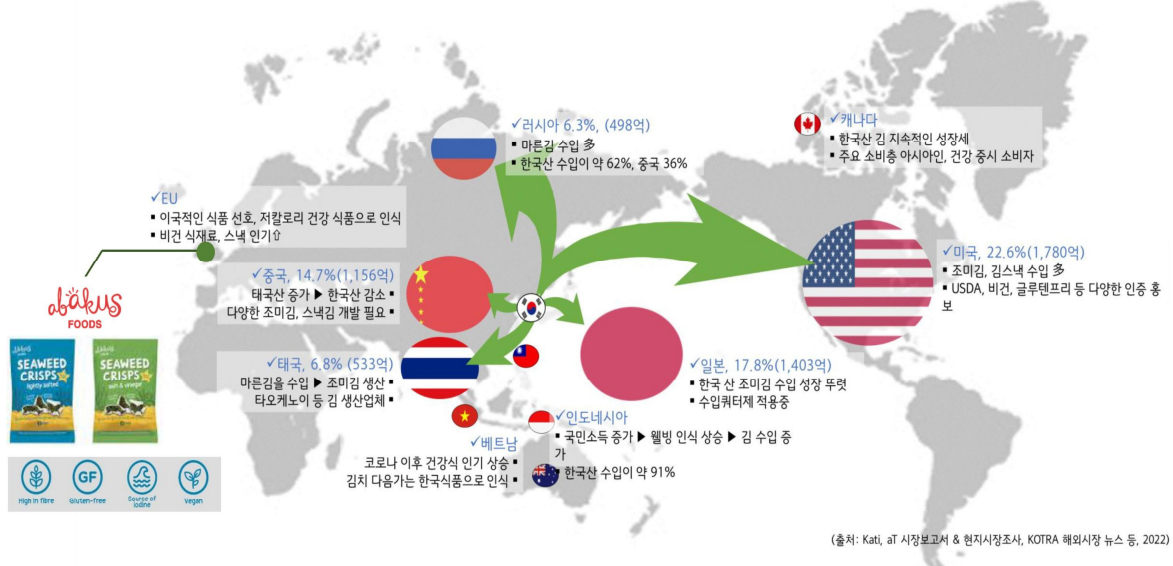
5 Copyright 2025 Pulmuo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우리나라는 글로벌 김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3년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 ('27년까지 1조 5천억원 수출을 목표로 함)
-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와 더불어 비건(Vegan), 식물성(Plant-based) 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김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8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김은 식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재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의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중요성이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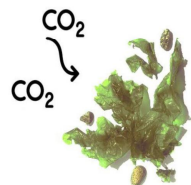
### 김(Laver)의 산업적 가치

- ✓ 식품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
  - 해조류는 식이섬유, 다당류(알긴산, 카라기난, 후코이단 등), 폴리페놀계 항산화 물질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순한 식품 자원을 넘어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바이오소재로 활용되고 있음
- ✓ 친환경 바이오소재로의 주목
  - 해조류 유래 다당류(알긴산, 아가로스 등)는 생분해성과 생체 적합성을 기반으로 의료용 하이드로젤,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의 대체재로서 산업적 주목을 받고 있음



### 김(Laver)의 환경적 가치

-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흡수하여 탄소를 유기물 형태로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해양 기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 분류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이 육상 산림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Krause-Jensen et al. 2018)
  - 해조류 양식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같은 제도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음



9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김 해상양식의 문제점

- 자연의존적 산업 : 바다의 환경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태풍 등으로 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높은 노동 강도 : 해상양식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으로 어민들의 노동강도가 점점 심화



▲ 태풍 피해로 쓸대밭이 된 김 양식장 (전남 해남군)



▲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 양식장 (전북 고군산군도)

10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김 육상양식의 필요성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해상양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불안정한 원료(물김) 공급 문제 해결 및  
글로벌 김 수요 성장에 따른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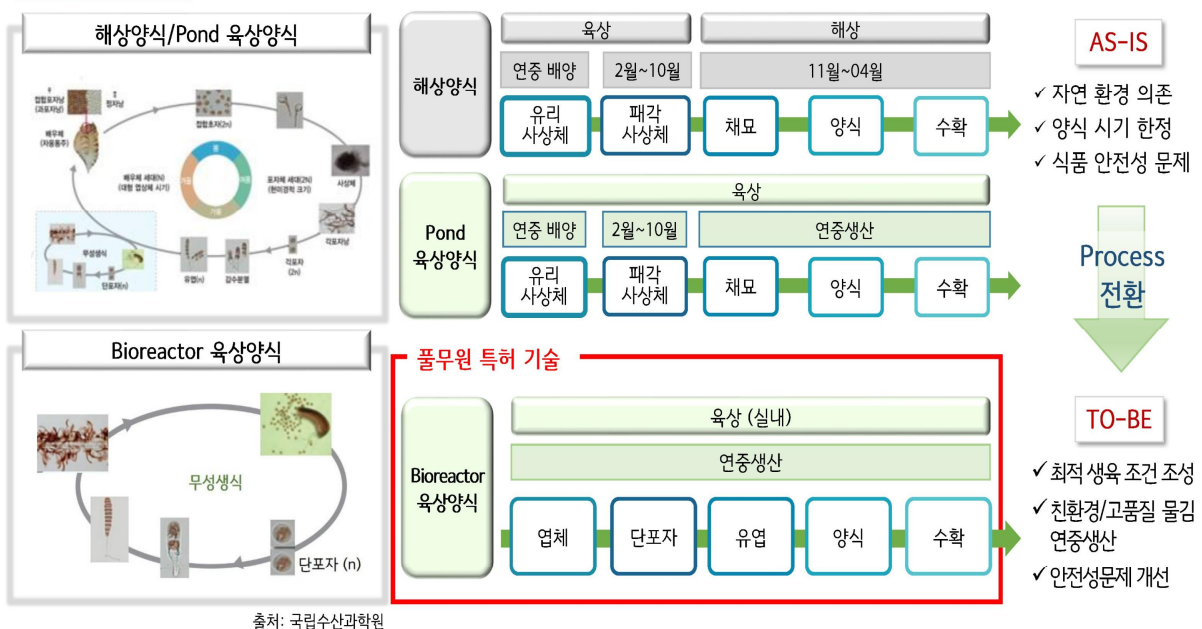
국내산 김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국내산 김 **품질 안전관리** 방안 필요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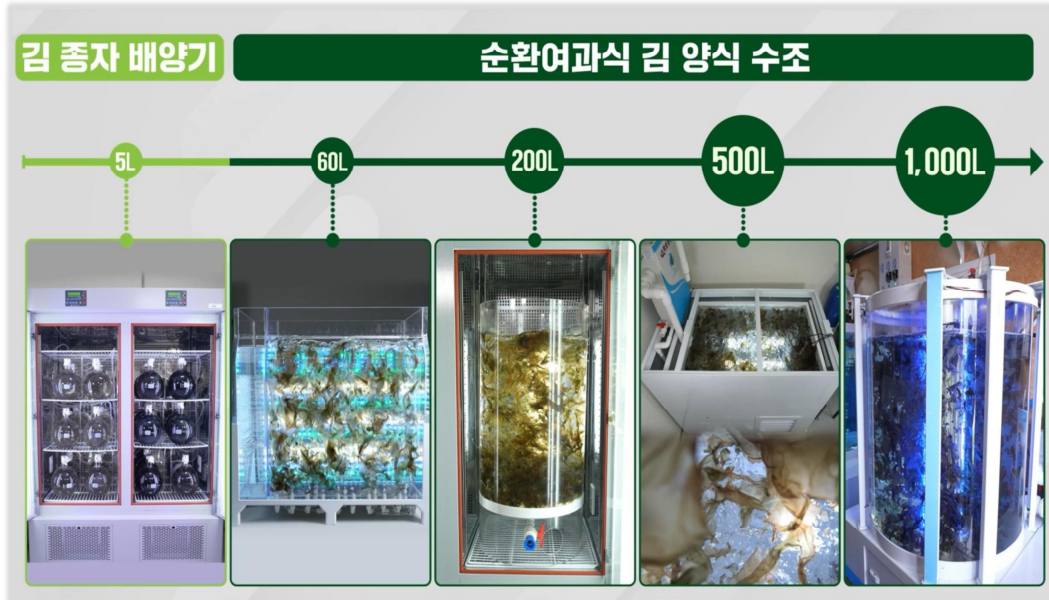
### 김 양식 process



11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풀무원기술원 내 시설에서 육상양식 물김 생산 / 용수사용량: 6톤/년 (반기에 한번 환수)
- 전주기 김 육상양식 process 정교화, scale-up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파악하여 설비 개선 진행 중



12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최근에는 전주기 김 육상양식 process 정교화, scale-up 과정을 통해서 10ton 규모의 PoC를 구축하여 운영



13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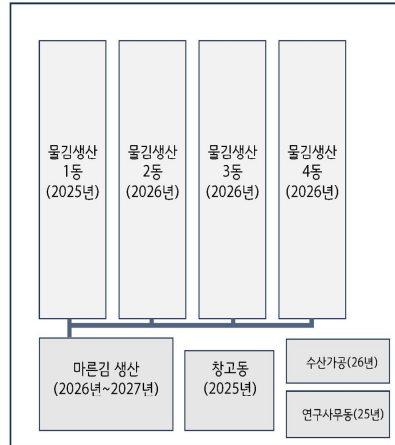
### 새만금 김 R&D 융복합 R&D 센터 구축

- 물김 생산부터 마른김 가공까지 One-Stop 라인 구축 및 단계적 확대 ('25년~'29년)
  -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모든 공정을 통합관리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 ASC-MSC 인증, 스마트 HACCP 및 ISO 인증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며, 미래 식품 제조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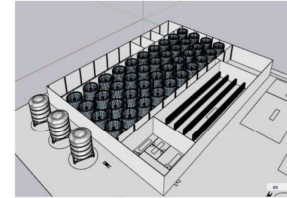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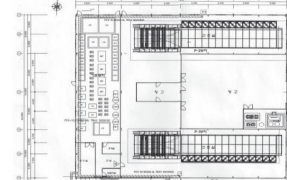
### 공장 구축(안)



### [물김 생산동]



### [마른김 생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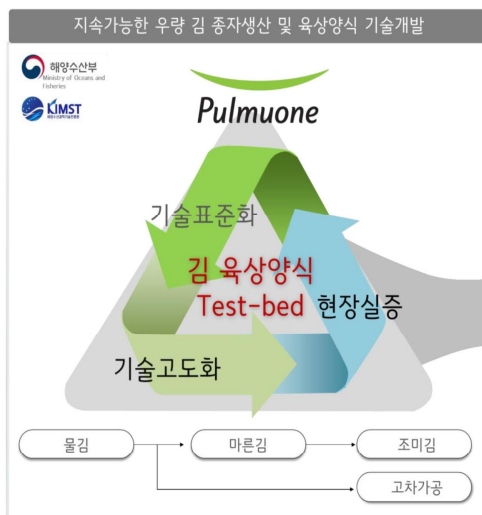


14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어민 보급형 육상양식 모델 개발

- 새만금 수출 가공단지에서 물김 양식 연구 개발을 통하여 **어민 보급형 모델**을 개발
- 전라북도 어가에 '김 육상양식 생산기술'을 전수하고 풀무원에서 매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생산기지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상생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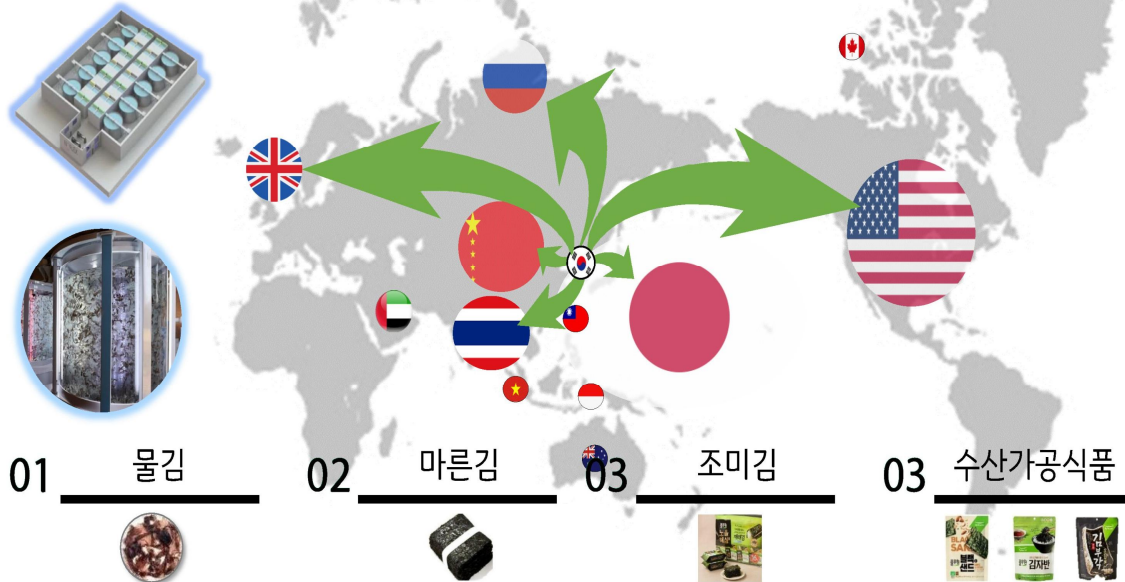
15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2. 혁신사업 - 김 육상양식

### 새만금 고부가가치 김 융복합 생산·수출 기지 구축

- 풀무원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고품질/친환경 고부가가치 김 생산 → 내수 및 수출 활성화



16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3. 혁신사업 - 동물복지 미래목장

“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 진다.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하다 ”



출처 : 영국 FAWC(농장동물복지위원회)

17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3. 혁신사업 - 동물복지 미래목장

#### 국내 축산 환경

#### 01 생산성 중심의 축산

- ✓ 세계 젖소 1두당 우유 생산성 : 대한민국은 세계 5위 수준 (1두당 평균우유 생산량 2023년 기준 9,273L)

#### 02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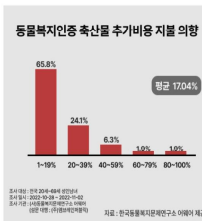
- ✓ 높은 사료곡물 해외의존도
- ✓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부담금
- ✓ 자급률 하락 & 원유 시장의 변화

원유 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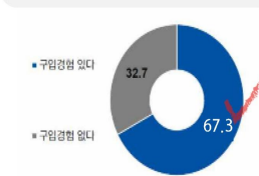


#### 03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변화

- ✓ 소비자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경향



### 3. 혁신사업 - 동물복지 미래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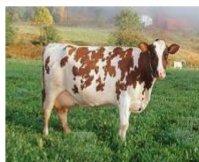
#### [대표적 젖소품종]



홀스타인  
(국내 농가 99% 사육품종)



저지



에이셔



브라운 스위스



건지



쇼트혼

| 품종      | 연간 생산량 (kg, L) | 하루 생산량 (kg, L) | Fat (%) | Protein (%) | Cull rate (%) |
|---------|----------------|----------------|---------|-------------|---------------|
| 홀스타인    | 11,172         | 35.5           | 3.69    | 3.09        | 36.5          |
| 저지      | 8,153          | 25.7           | 4.80    | 3.65        | 33.5          |
| 에이셔     | 6,722          | 21.2           | 3.93    | 3.21        | 34.7          |
| 브라운 스위스 | 8,398          | 26.9           | 3.93    | 3.21        | 34.7          |
| 건지      | 7,048          | 22.3           | 4.65    | 3.38        | 38.2          |
| 쇼트혼     | 6,477          | 20.0           | 3.64    | 3.14        | 35.0          |

### 3. 혁신사업 - 동물복지 미래목장

#### [국내 vs 유럽 사육시설 비교]

##### 툼밥우사 (우리나라)

- 사육밀도: 착유소 기준 마리당 16.5 m<sup>2</sup>
- 넓은 우방과 채식장의 구분 없음
- ✓ 군사사육
- ✓ 분변처리시스템 도입이 어려움



##### 후리스톨우사 (유럽형)

- 사육밀도: 착유소 기준 마리당 8.3 m<sup>2</sup>
- 각각의 개인적인 공간과 채식장으로 구분
- ✓ 자동화 기계에 최적화된 구조
- ✓ 분변처리 시스템으로 위생과 청결을 유지



20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3. 혁신사업 - 동물복지 미래목장

“ 국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스마트 목장 모델구축을 통해  
청년 축산농가의 9 to 6 구현 ”

##### 새로운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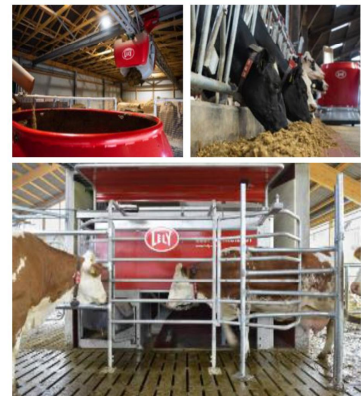


저지종

##### 후리스톨우사 (유럽형)



##### 자동화 로봇 설비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내 『동물복지 스마트 목장 모델』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인력양성의 교육장으로 활용 계획

21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급격한 기후 변화와 농업 인구의 감소, 높은 고령화율, 농업경영비 상승  
농산물 가격 등·폭락 심화, 원료 소싱 Risk 증가

기후의 급격한 변화

농가호수·인구 감소

65세↑ 높은 고령화

외국 노동자에 의존



경험이 아닌 기술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를 요구

22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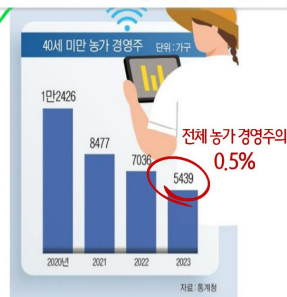
농촌은 청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청년층 38% vs 청년농업인 경영주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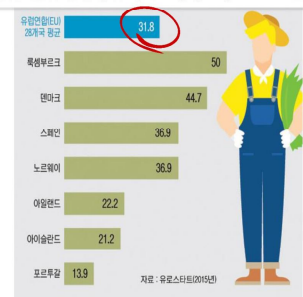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업

대한민국...늘어나는 농촌 찾지않는 청년



유럽...젊은 유럽 농촌 농부 3명 중 1명 '40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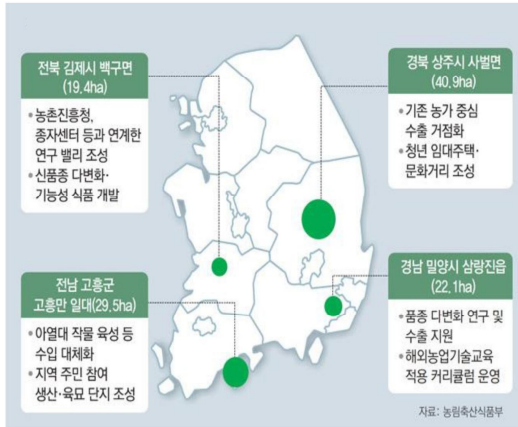


23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 01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02 스마트농업 단계별 지원계획(모식도)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그러나,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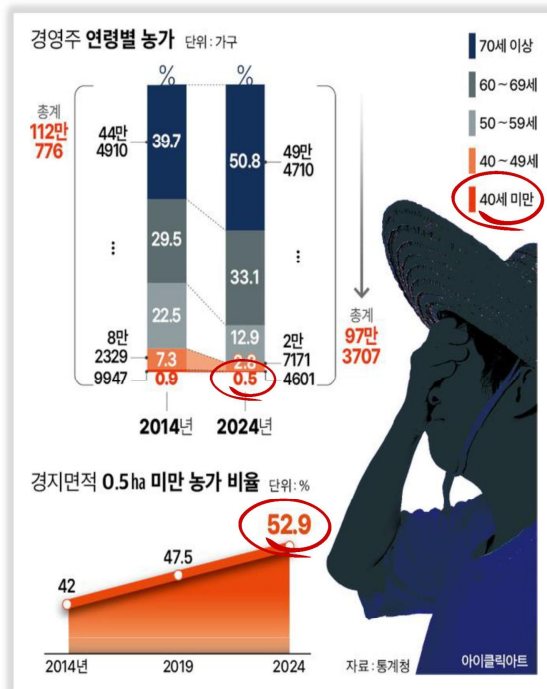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의 어려움

- 정부 용자한도로 작은 규모 농지, 작은 실내농업 시설 구축만 가능
- 양질의 농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움
  - 논은 필지당 면적이 넓고 매립비용이 발생함
  - 소규모 농지에서는 함께 농업을 영위할 일용직 구하기도 어려움 등

→ **스마트팜의 초기 자본 부족과 농지 확보 문제가 주요 진입 장벽**  
청년들에게 미래 지향적 농업 모델로 인식됨에도 쉽게 접근이 어려움

##### 농산물 판로 확보 어려움

- 수확한 농작물의 판매 경로 확보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 intermediate technology : 첨단 기술과 전통 기술 사이의 중간 기술

전통적 농업 : **작물중심**, 노동집약 농업



26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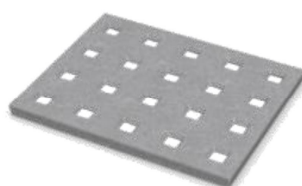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 : **사람중심**, 허리펴는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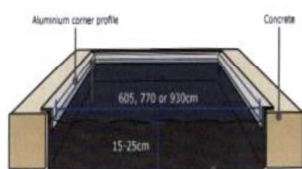
##### ✓ DWC(Deep Water Culture)

- 옥조와 같은 큰 수조위에 식물이 들어 있는 재배베드(Floating)을 띄워 재배하는 수경재배시스템으로 물을 매개로 재배 베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재배 bed (스티로폼 or 플라스틱)

+



수경재배 pond



DWC 재배사진



27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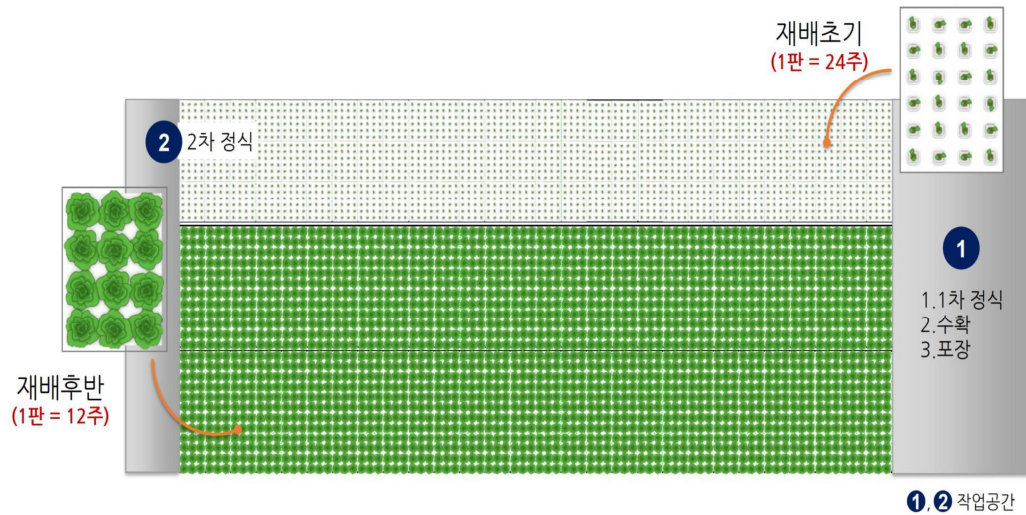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 : **사람중심**, 허리펴는 농업

✓ DWC(Dep Water Culture)

- 전체 재배면적의 80~85%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배초기와 재배후반의 재배 bed(Floating)의 재식 주 수를 다르게 하여 생산량의 극대화가 가능



28 Copyright 2025 Pulmuo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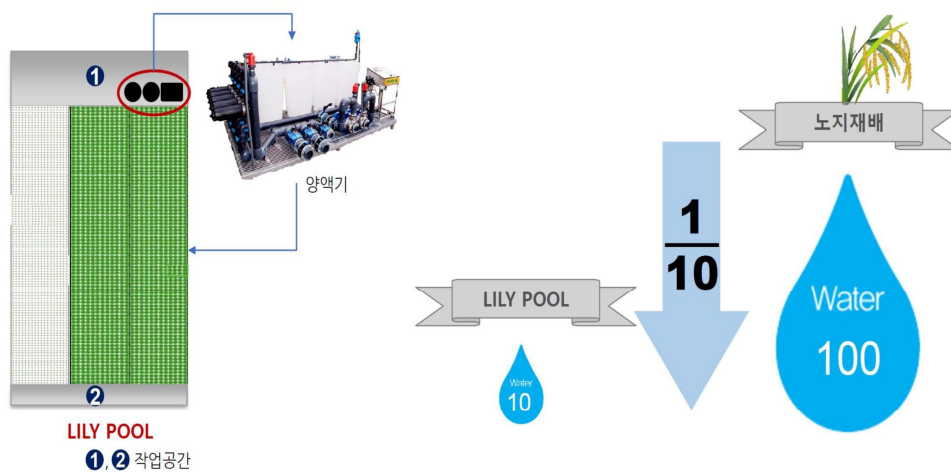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 : **사람중심**, 허리펴는 농업

✓ DWC(Dep Water Culture)

- Recycle을 통해서 노지재배와 비교하여 물 사용량을 1/10로 절감 가능



29 Copyright 2025 Pulmuo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 : **사람중심**, 허리펴는 농업

✓ DWC(Depth Water Culture)

- '작물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유럽과 미국에서 최근 업체류 전문 재배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허리 펴는 농사가 가능하여 여성의 농업참여가 가능)



30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비닐온실 + DWC 적용 사례



샐러드 가공센터(전처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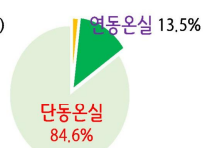


샐러드 제품

국내 시설온실 비복재별 분류



국내 시설온실 유형별 분류



통계청 자료 : 2021



31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설비투자를 가볍게. 그렇지만 혁신적으로!

##### ✓ 거터베드 재배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과채류 재배)

- 거터 재배는 홍통 모양의 베드에 작물을 심어 양액을 순환시키며 재배하는 방법으로 재질은 주로 녹방지를 위해 스텐레스, PVC, 알루미늄, 구리, 아연도금 철판 등을 사용



거터 재배시스템 (고정형 재배)



거터 재배시스템 (행잉 재배)

32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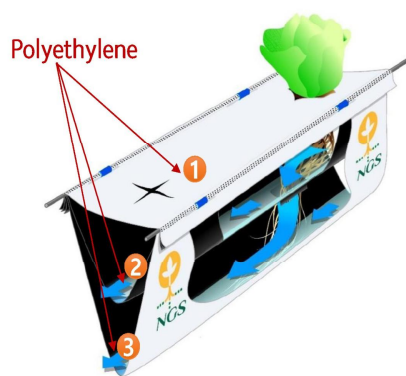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설비투자를 가볍게. 그렇지만 혁신적으로!

##### ✓ 비닐거터 재배

- 엽채류와 딸기 등 소형 원예작물 뿐만 아니라 오이, 가지, 애호박, 토마토 등 큰 원예작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예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재배시스템



상추(oscillating 방식)



딸기(rotating 방식)



오이(Fixed 방식)

33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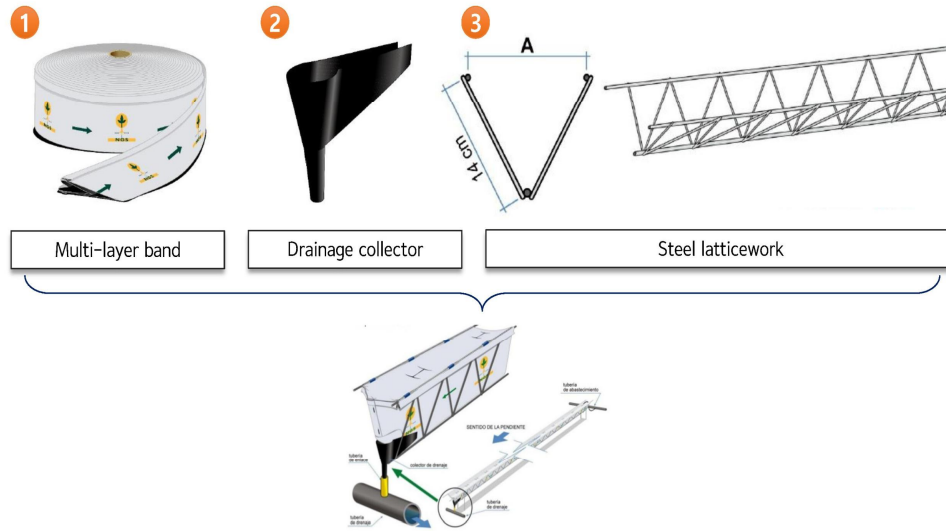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1 시설스마트팜 - 『적정 기술』 적용

설비투자를 가볍게. 그렇지만 혁신적으로!

✓ 비닐거터 재배

- Multilayer band와 Drainage collector, Steel latticework의 3가지로 크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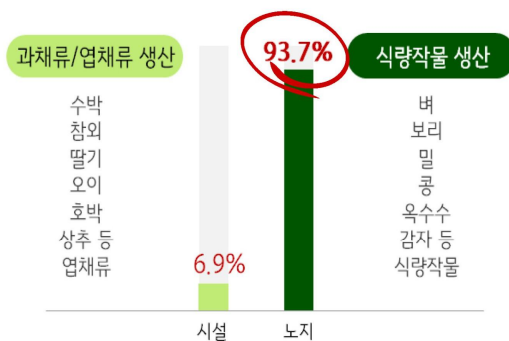


34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2 노지스마트팜 - 『농업용 로봇틱스 기술』 적용

<농업 형태 및 형태별 생산 비중>



출처: 통계청 농업생산 면적 비교(2020),  
농진청 논에 짓는집, 온실-미래 농업을 여는 열쇠(2018)

‘인력난 시름’...파종·수확 업무 못 내는 농촌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 산지 생산기반 ‘흔들’  
일손부족 심화...작목 전환·영농 포기 ‘속출’

“해남배추, 수확할 사람이 없다”



35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2 노지스마트팜 - 『농업용 로봇틱스 기술』 적용

자동화를 위한 육묘방식의 변화 필요

✓ 국내의 플러그요 방식이 아닌 유럽의 soil block 방식의 적용이 필요



36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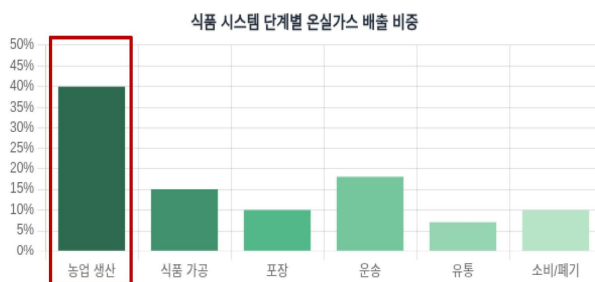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3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품산업



###### 식품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이 식품 시스템에서 발생하며, 농업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이 이루어짐
- 식품기업들의 공급망(Scope 3) 배출이 전체 배출의 70-90%를 차지



###### 토양 탄소 격리의 중요성

- 건강한 토양은 대기 중 CO<sub>2</sub>를 격리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
- 전 세계 토양의 탄소 저장 잠재력은 연간 최대 50억 톤 CO<sub>2</sub>e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농업 배출량의 약 90%에 해당

###### 규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K Food 경쟁력 확대추진 필요

-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응
- ✓ 투자자 및 소비자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
- ✓ 토양 탄소 측정 및 인증의 표준화된 체계 구축

\*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세계 식품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동향

- 네슬레: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재생농업 확대 프로그램 운영
- 팜시코: 2030년까지 7백만 에이커를 재생농업으로 전환
- 마스카길 등 12개 기업컨소시엄: 재생농업 확대를 위한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공급망 참여자들과 함께 토양 탄소 증진 실천 확대

37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3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품산업

###### 재생농업을 통한 토양 탄소 격리 방법

✓ 토양 탄소 격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 농업의 주요 실천 방법

|                                                                                                                                                                                                                            |                                                                                                                                                                                                                      |                                                                                                                                                                                                                             |
|----------------------------------------------------------------------------------------------------------------------------------------------------------------------------------------------------------------------------|----------------------------------------------------------------------------------------------------------------------------------------------------------------------------------------------------------------------|-----------------------------------------------------------------------------------------------------------------------------------------------------------------------------------------------------------------------------|
| <p><b>피복작물(Cover crops) 재배</b></p> <p>작물 생산 사이 기간에 피복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을 보호하고 유기물을 증가시킵니다.</p> <p><b>주요 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 침식 방지 및 구조 개선</li> <li>근권 유기물 축적 증가</li> <li>공생 미생물 활동 촉진</li> </ul> | <p><b>무경운/최소경운</b></p> <p>토양 교란을 최소화하여 토양 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p> <p><b>주요 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 구조 및 미생물 서식지 보존</li> <li>토양 유기탄소 산화 감소</li> <li>토양 수분 보존 및 침투율 향상</li> </ul> | <p><b>작물 다양화 및 윤작</b></p> <p>다양한 작물을 순환 재배하여 다양한 뿌리 깊이와 생물다양성을 촉진합니다.</p> <p><b>주요 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 영양분 균형 개선</li> <li>병해충 순환 감소</li> <li>토양 생물 다양성 증가</li> </ul>                       |
| <p><b>퇴비 및 유기물 투입</b></p> <p>퇴비와 유기물을 토양에 투입하여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탄소를 격리합니다.</p> <p><b>주요 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 미생물 활동 촉진</li> <li>토양 수분 보유력 향상</li> <li>농업 폐기물의 순환적 활용</li> </ul>                 | <p><b>혼농임업(Agroforestry)</b></p> <p>농경지에 나무를 통합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탄소 저장 용량을 증대합니다.</p> <p><b>주요 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 및 지하 바이오매스 확대</li> <li>생태계 서비스 강화</li> <li>심층 토양 탄소 저장 촉진</li> </ul> | <p><b>바이오차(Biochar) 적용</b></p> <p>열분해된 바이오매스를 안정적인 탄소 형태로 토양에 적용합니다.</p> <p><b>주요 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안정적 탄소 저장(수백~수천 년)</li> <li>아산화질소 및 메탄 배출 감소</li> <li>토양 미생물 활동 및 비옥도 향상</li> </ul> |

38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 3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품산업



###### 바이오차(BioChar)란?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농업부산물, 목재 등)를 열분해하여 생산된 탄소가 풍부한 안정적인 물질로, **토양개량**과 **탄소격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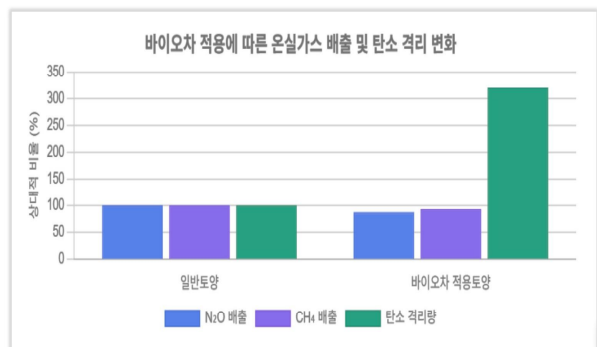
→ 바이오차 탄소는 일반유기물의 탄소보다 15~20배 더 안정적으로, 토양에서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



➢ 기후변화에 관련 정부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 2019년 IPCC에서 이산화탄소(CO<sub>2</sub>) 저감방안으로 승인  
: 바이오차 내 탄소는 100년 후에도 89% 토양에 잔류
-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바이오차' 사용 반영

● **농업분야 유일한 탄소저장 기술 ... 미세공극에 탄소 격리**



**13.1%**

**아산화질소(N<sub>2</sub>O) 배출 감소효과**  
아산화질소는 CO<sub>2</sub>보다 약 26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

**6.8%**

**메탄(CH<sub>4</sub>) 배출 감소효과**  
메탄은 CO<sub>2</sub>보다 약 28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

39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 4. 혁신사업 - ESG 스마트팜

Net Negative 스마트팜 모델 구축 → Net Zero 지속가능식품

##### 3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품산업

콩 재배지 + 바이오차 설비 + 적정기술 스마트팜 = Complex

콩 부산물을 바이오차 제조와 활용 후 경지에 재투입하는 자원 순환 모델



40 Copyright 2025 Pulmu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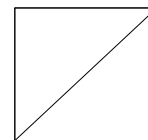




제 25 차 위 원 회

심 의 안 건  
( 1 건 )





|              |                           |      |
|--------------|---------------------------|------|
| 의안번호         | 제2025 -6호                 | 의결사항 |
| 심 의<br>연 월 일 | 2025. 05. 19.<br>(제 25 회) |      |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증장기 정책 방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                                   |       |
|--------|-----------------------------------|-------|
| 제 출 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br>(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 한 호 |
| 제출 연월일 | 2025. 5. 19.                      |       |





## 1. 의결주문

-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에 대한 의결

## 2. 제안 이유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세대인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중은 지속 감소  
※ 경영주 연령별 농가비중(65세이상/40세미만, %) : '90년) 18.3/14.6 → '24년) 69.6/0.5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농업 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 방안 모색
- 유입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창농 이후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확보,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선 필요

## 3. 주요내용

- **(창농 준비지원 강화)**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 연수과정에 있는 경우 창농준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선도농가·농업법인 등을 활용한 현장 실습형 농장 확대 지정·운영
- **(공동영농 참여 확대)** 가족 종사자 및 농업법인 참여자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고령·은퇴농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등
- **(지역 맞춤형 육성체계 구축)** 지역 선택품목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 종합 지원, 자자체별 One-stop 서비스 체계 도입, 유휴 농지 등 활용한 조성형 농장 확대

- (농업금융 지원제도 개선) 대출 자금 신청 전 개인신용 평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 금융지원상담센터 마련, 청년창업농 영농능력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담보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 중심의 보증 지원체계 도입

####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워킹그룹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2024.5.~2025.4./ 7회)
- 연구용역 추진(2024.7.25. ~ 12.13.) / 재) GS&J인스티튜트
- 청년농업인 의견수렴 현장간담회 추진(2024.9.~12.)
  - \* ① 호남권(9월), ② 중부권(10월), ③ 경상권(11월), ④ 충청권(12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협의(2025.4.23. ~ 4.25.)
  - 농림축산식품부 서면 검토
-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2025.4.28.)
  -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 의결
-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2025.4.29.~5.1.)
  - ※ 본 의안 의결 이후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이행계획 등을 위한 협의 예정

#### 5. 첨부

-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 요약 1부.
-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 전문 1부.

심의안건

---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

---

2025.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요약)

### □ 추진배경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세대인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중은 지속 감소  
※ 경영주 연령별 농가비중(65세이상/40세미만, %) : '90년) 18.3/14.6 → '24년) 69.6/0.5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정책 개선 방안 모색

### □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

- (창농 준비지원 강화)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 연수과정의 청년농업인에게 창농준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선도농가·농업법인 등을 활용한 현장 실습형 농장 확대 지정·운영
- (공동영농 참여 확대) 가족 종사자 및 농업법인 참여자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고령·은퇴농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등
- (지역 맞춤형 육성체계 구축) 지역 선택품목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 종합 지원, 자자체별 One-stop 서비스 체계 도입, 유휴 농지 등 활용한 조성형 농장 확대
- (농업금융 지원제도 개선) 대출 자금 신청 전 개인신용 평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 금융지원상담센터 마련, 청년창업농 영농능력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담보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 중심의 보증 지원체계 도입

### □ 기대효과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업 세대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 농업법인 등 공동영농 참여 촉진으로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목 차



|                           |    |
|---------------------------|----|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 41 |
| II.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애로사항 ..... | 42 |
| III. 추진방침 .....           | 44 |
| IV. 중장기 정책 방안 .....       | 44 |
| V. 기대효과 .....             | 49 |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 방안 모색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 세대인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중은 지속 감소
    - ※ 경영주 연령별 농가비중(65세이상/40세미만, %) : '90년) 18.3/14.6 → '24년) 69.6/0.5
  -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정착자금, 창업자금, 기술교육, 농지지원 등)이 **창농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후속 지원 및 관리의 부족**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구조
    - 유입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창업 이후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 부족
    - 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확보,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 중장기적 지원 요구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 스마트농업, 융복합산업 등을 **고부가가치 농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농업금융 전반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영농기술지원 제도**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정책 시행**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 (경과) 농어업분과위원회 청년농업인 워킹그룹 운영 및 성과
  - 농어업분과위원회 산하 청년농업인 워킹그룹 운영
    - (구성) WG 위원(총 8명) \* 그룹장: 박다정 본위원(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 (운영) 총 7회('24. 5월 ~ 현재)
    - (주요의제) 청년농업인 정책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 정책연구용역 병행
  - 청년농업인 의견수렴 현장간담회 추진(4회, '24.9.~12.)
    - \* ① 호남권(9월), ② 중부권(10월) ③ 경상권(11월) ④ 충청권(12월)

## 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애로사항(간담회 결과)

### □ 청년창업농의 선발 기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 영농 정착계획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다수 선정·지원됨에 따라 영농 정착 실패 사례 증가
  - 영농기술·경영지식 준비 부족 → 농업 생산성 저하, 영농실패 발생 → 농업 수익성 악화 → 정착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 영농창업 준비 단계(사전교육, 농업법인 등 취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창농을 위한 영농지식, 경영준비가 어려움
- 청년창업농·후계농 의무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에 한계
  - 영농정착 촉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농지식과 경영 능력 확보가 중요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실태 분석 결과(24. 농어업위) 농업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농업 진입 초기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정도가 비이수자에 비해 낮음
  - 사후 역량강화 교육보다는 사전 영농준비 교육을 강화하여 지원 필요
  -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취업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필요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준 보완 시행 요청

- 영농정착지원 기준이 공동경영보다는 개별 독립경영체 육성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독립경영체 마련을 위한 여러 문제 봉착
  - 농업법인 참여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부부 등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필요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일정 기간 내(익년 3월까지)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 무리한 농지 구입 등으로 부실 경영 초래
- 영농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농업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생활비, 이자 등 필요한 수입 확보를 위해 농외소득 조건 완화 필요

## □ 농지 확보의 어려움 및 농지은행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여 경쟁 심화
  - 농지은행의 신규 창업농 우선 지원 정책으로 진입 초기(2~5년차) 청년농은 농지 확보가 어려워 영농기반 구축, 성장규모 확대에 애로
- 비축농지의 기반정보(배수 상태, 토질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농지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갈등 초래
  - 비축 농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임대수탁사업 지침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 명문화 필요
- 임대 농지는 형질변경이 어려워 청년농이 선호하는 시설농업 추진에 한계
  - 스마트팜 및 체험농장을 위한 복토, 포장 등 기반설치 규제 완화 필요

## □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단위 전담조직 도입 및 단계별 지원 확대 요청

- 영농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정보 상담을 한곳에서 해결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필요(지자체, 농협, 농신보, 농지은행 등 연계 부족)
  - 정책 정보,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체계 마련
  - 정책 연계 및 활용 정보를 제공·안내 할 수 있는 지역코디네이터 육성
- 신규 창업농 중심의 정책으로 기존 청년농의 규모 확장 지원 미흡
  - 도약 단계로 성장하려는 농가에 농지 및 운영자금 추가 지원
  -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

## □ 후계농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활용의 어려움 호소

-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보증 절차 등이 복잡
  - 지자체, 농협, 농신보 등 각 기관별로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대출 실행에 과도한 시간과 중복된 서류 준비 필요
- 대출 실행 시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자금 활용 어려움
  - 농업인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청년 창업농은 자산이 없어 담보 능력 부족

### Ⅲ. 추진방침

- 청년농업인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끌 핵심 세대로 육성
  - 초기 창농 단계에서 성장, 도약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자금, 농지, 기술,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영자로 성장 기반 마련
  - 규모화·전문화·혁신화를 목표로 스스로 성장하는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도약

### Ⅳ. 중장기 정책 방안

- ①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 농업인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예비농업인제’(농업경영체) 도입
    - 영농기반(토지·시설·축사 등)은 아직 갖추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농업경영체에 정식 등록(또는 농업법인 참여) 할 목적으로 준등록(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농업경영체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 40세 미만인 신규 농업인이 예비농업인(농업경영체)으로 등록하면, 일정한 농업 교육·훈련 및 경영(세무·회계 등)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
    - 농업 관련 창업 준비자금, 농지 구입 자금, 세제 지원, 주거 및 생계유지 등 영농 개시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
  - 예비농업인이 영농경험을 쌓기 위해 농업법인이나 전업농가에 일시 취업하여 연수 과정에 있는 경우 창농준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영농기술 습득, 영농 과정의 애로 요인 대응 방안 모색, 멘토 관계 구축 및 창농에 필요한 자금 축적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과정 필요
    - 자금 지원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창농 또는 법인 참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회수
- \* 예) 일본의 영농개시자금 지원(월 12만엔, 최장 3년) 지원 등



- 선도농가, 농업법인 등 활용한 **현장 실습형 농장 확대 지정·운영**
  - 예비 청년농이 농업법인 등 실전 경영 현장에 참여하여 실습, 영농경험,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WPL(Work Place Learning) 농장 지정 확대**
- ※ WPL 농장 지정 현황('24): 119개소(과수 34, 채소·특작 43, 축산 24, 6차산업 등 18)
- 선도농가·농업법인·농업마이스터·한농대 장기현장실습장 등과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실습 운영 모델 마련**
- 유입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기간별 경영 능력을 진단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영농 실패 최소화 방안 마련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부활하여 법인의 청년농업인 고용을 유도
- \* 만18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신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 급여의 80% (최대 161.6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2년까지 지원 후 사업 종료(일몰)

## 모 형

### 우공의 딸기정원(경북 상주)

- 종합 딸기 기업으로 국내 최대(6,000평) 딸기 유리온실과 체험 시설 운영
- 딸기 수출을 목표로 품질 균일화와 농가 규모화를 위해 청년 농부 육성
- 성장 로드맵
  - 인턴 농부 → 레지던트 농부 → 파트너농부 → 프랜차이즈 독립농부

|            |                                                |
|------------|------------------------------------------------|
| 인턴 (6개월)   | 6개월간 실제 딸기 농사일을 하며 적성을 확인하고, 농작업 기술 전수         |
| 레지던트 (2년)  | 정직원 전환, 최소 2작기 경험, 딸기 농사 이론과 스마트팜 경영전반 멘토링     |
| 파트너 (지속)   | 회사 소속의 대규모 거점 농장 농장장 혹은 관리자가 되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
| 프랜차이즈 (지속) | 본인의 농장 직접 경영하되 유통은 '우공의 딸기정원' 공동브랜드로 출하        |

- 농업법인이 조성한 표준화된 농장을 청년농에게 분양·지원하고, 브랜드·기술·유통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 파트너십형 창업 지원 모델\*** 육성
- \* 농업법인이 '본사' 역할, 청년농은 '가맹 창업자'로 참여하는 방식

## ② 농업법인 등 공동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농업법인 내에서 영농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수혜자도 농업법인으로 통합하여 규모화하고자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청년농업인육성 정책을 창업 위주의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법인 등 공동영농참여 청년농을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 개편
  - 가족 종사자 및 농업법인 참여자도 정책자금(영농정착지원, 후계농육성 자금, 국민연금료 보조 등)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의 농업 법인 참여를 유인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예: <sup>(가칭)</sup>청년농업인 도약지원계좌\*)
- \* 청년농업인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중기부 청년내일공제 참고)
- 후계농 부재로 소멸되는 고령·은퇴농(법인)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 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 청년농의 농업자산 인수 촉진을 위한 농업경영이양 지원 정책 강화
    - ▶ (제도개선) 고령·은퇴농의 자산 이양 촉진을 위한 은퇴지원제도\* 확대, 법인 지분 양도 및 임원 변경 절차 규제 완화 등 경영 투명성·참여 개방성 강화
  - \* 법인내 퇴직연금+이양 보상을 병행하는 경영승계지원,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등
  - ▶ (정책마련) 고령농-청년농 매칭 플랫폼\* 구축, 법률·세무·경영 분야 농업 전문 컨설팅 시스템 마련, 금융·세제 지원 등
- \* 예: 일본 농업경영이양 종합지원센터, 프랑스 RBI(농촌개발정보 센터)
-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참여를 원할 경우 기지원받은 정책자금(후계농육성자금 등)을 법인으로 승계 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현물출자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이 농업생산 목적으로 지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점에서 허용
  - 악용 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감정 평가액에 한정된 대출금만 이전 또는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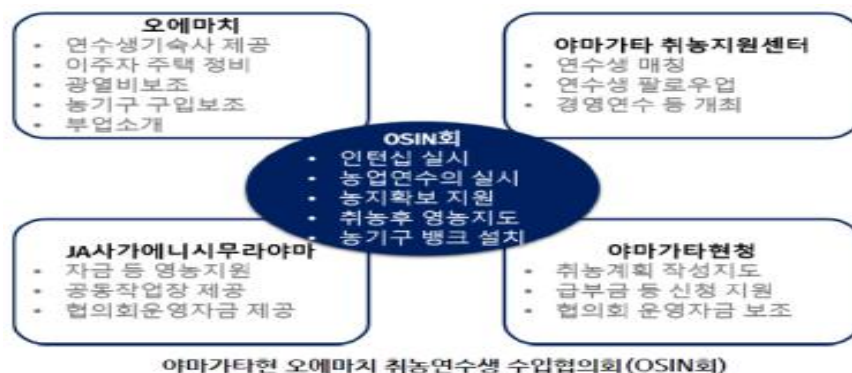
###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 지역 선택품목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지원
  - 지자체별 민관거버넌스 구성, 실습농장 구축, 영농교육, 지역 특화 수익모델 제시, 정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패키지 지원
  - \* 지역단위 창농생태계 조성을 종합지원하는 공모사업 등으로 우수모델 발굴
- 지자체별 One-Stop 서비스 체계(가칭: 청년농업인 통합지원 전담 조직)를 도입하여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금, 농지, 시설, 영농기술, 생활인프라, 정착지원, 세무·회계 등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컨설팅 제공
  - 관련기관, 선도 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운영비, 표준 모델 개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

#### 참 고

#### 일본 도도부현 단위의 취농서포트 체제 구축 사례

- 2020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규 취농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사업 진행
- 농림수산성 보조사업(공모사업): 신규 취농자 확보/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기관이 연계해 지원하는 수용체제 구축 후 지원



\* 지역의 농업인들이 신규 취농자를 육성하는 단체(OSIN회)를 설립, 연수·지도 실시

- 지자체 소유 농지, 국·공유지 및 유휴 농지 등을 활용한 조성형 농장 확대 및 지역에 특화된 청년농 교육·컨설팅 지원
  - 시설(온실) 농업 운영 및 재배 기술 사전경험으로 창농 밑거름 마련
  - 자자체별로 적합한 현장 실습농장의 도입·운영, 장기 교육과정 마련, 성장단계별(창농준비-창농-안정-도약)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스마트팜 이론 및 현장실습 통합 운영
  - 의성군은 스마트팜 T/F 설치하고,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농장 구비
  - 교육시간 : 800시간(이론교육 200시간, 창업 실습 600시간)
-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스마트팜 창농을 위하여 2억 원의 시설투자 보조금 및 스마트농업 컨설팅 지원(2년, 연 5백만 원)
  - 자력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실습농장 옆 임대농장을 지원

그림 - 의성군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체계



#### ④ 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전 개인신용 확인 절차 의무화 및 지원체계 개선
  -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전 농협, 농신보<sup>1)</sup> 등을 통해 사전 개인신용 평가 및 자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사전검토 지원체계 구축
- 정책자금지원 상담센터를 도입하고 자금 지원체계를 개선
  - 청년창업농이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지자체, 농신보, 농협 등)을 방문해야 하고, 각 기관(지역) 마다 신용평가 결과가 달라 혼선 발생
  - 농신보에 금융지원상담센터를 마련하여 자금 실행 여부 종합 상담·지원
    - \* 정책자금 지원 조건과 청년농 개개인의 담보능력,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별 자금 대출 가능 여부 안내
- 농신보와 농금원<sup>2)</sup>이 협력하여 청년농업인 영농능력 평가모형 개선
  - 영농 준비가 부족한 청년창업농에게 과도한 자금이 지원되어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성, 영농 준비 정도 평가 강화 지원
  - 청년창업농 영농능력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담보 중심 지원에서 사업성, 경영능력 중심으로 보증체계를 개선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창업 후 성장과 도약을 위한 규모 확장(scale up) 지원

- \* 금융기관은 부실화를 우려하여 담보가 없는 청년창업농에 대한 자금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농신보가 중심이 되어, 영농능력이 높은 청년농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신용평가체계를 구축

## V. 기대효과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다양한 육성정책 추진과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창농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률을 제고
- 농업법인, 공동영농 등에 대한 청년농의 참여를 촉진하여 농업 규모화, 단지화를 통한 농업생산 혁신을 유도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업 세대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

|                     |                                                 |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br>사무국 |                                                 |
| 담당자                 |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
| 연락처                 | 전 화 : 02-6260-1251<br>E-mail : ley1970@korea.kr |

제 25 차 위 원 회

**보고 안건**  
( 4건 )





---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2025.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주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
  - 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3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축, '24년에 이어 '25년 공식 공표
-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지표를 구축하고 지수화하여, 정주여건, 지역발전 수준,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영역별 객관적 자기 평가 통해 자발적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 설정 유도
  - 선형변환 방법 통한 지표 표준화 및 가중치 적용을 통해 5개 영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20개 지표의 지수 산출
- (결과)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9.6점이며, 농어촌 군 지역은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 농어촌 군은 경제 및 문화·공동체 영역에서 긍정적이며,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및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경제) 도농복합시가 GRDP·재정자립도, 농어촌 군은 고용률에서 우세
    - (보건·복지) 도농복합시와 농어촌 군 간 자살사망률 지표는 유사한 수준이나, 기대수명과 보건복지비율에서 농어촌 군 지역이 낮은 편
    - (문화·공동체) 농어촌 군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도농복합시는 문화시설 접근성이 용이
    - (환경·안전) 도농복합시가 농어촌 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 (지역활력) 청년인구 유지와 교통접근성에서 도농복합시가 상대적 우위





## 목 차



|               |    |
|---------------|----|
| I. 추진배경 ..... | 59 |
|---------------|----|

|                          |    |
|--------------------------|----|
| I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요 ..... | 60 |
|--------------------------|----|

|                                |    |
|--------------------------------|----|
| III.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 | 62 |
|--------------------------------|----|

|               |    |
|---------------|----|
| 1. 종합지수 ..... | 62 |
|---------------|----|

|                 |    |
|-----------------|----|
| 2. 영역별 지수 ..... | 67 |
|-----------------|----|





## I. 추진 배경

-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주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

\* 농가인구 ('21) 221.5만 명 → ('22) 216.6만 명 → ('23) 208.9만 명 → ('24) 200.4만 명  
고령인구비율 ('21) 46.8% → ('22) 49.8% → ('23) 52.6% → ('24) 55.8%(통계청, 2025)

-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 증가하고, 필수 생활 서비스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

\* 인구감소지역 612개 면 중 약국 없는 면: ('10) 345개 → ('20) 362개, 음식점 없는 면 ('10) 86개 → ('20) 144개(KREI, 2022)

-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23년에 구축 '24년 공표

- 기존 농어촌 정책들이 개별 사업과 성과 위주로 평가되던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주관적·객관적 지표를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축

- '25년 평가는 전년도 공표된 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연차별 변동성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삶의 질 수준 변화를 점검하는데 목적

- 5대 영역 20개 지표를 중심으로 농어촌 군과 도농복합시 간 차이를 분석

- 지수를 통해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강점과 보완 분야를 식별하고,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I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요

-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정주여건, 지역발전 수준,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축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태를 진단하고 취약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지표로 기능
- (구성)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영역 ①경제, ②보건·복지, ③문화·공동체, ④환경·안전, ⑤지역활력으로 구성

###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

|    | 경제(4개)                                                | 보건·복지(4개)                                                 | 문화·공동체(4개)                                                     | 환경·안전(4개)                                                       | 지역활력(4개)                                                |
|----|-------------------------------------------------------|-----------------------------------------------------------|----------------------------------------------------------------|-----------------------------------------------------------------|---------------------------------------------------------|
| 내용 | ▶ GRDP(+)<br>▶ 고용률(+)<br>▶ 시군구 사업체 수(+)<br>▶ 재정자립도(+) | ▶ 자살사망률(-)<br>▶ 기대수명(+)<br>▶ 긴급복지지원율(-)<br>▶ 보건복지예산 비율(+) | ▶ 삶의 만족도(+)<br>▶ 문화시설 접근성(-)<br>▶ 사회활동 참여율(+)<br>▶ 가족관계 만족도(+) | ▶ 빈집률(-)<br>▶ 지역안전도(+)<br>▶ 하수도보급률(+)<br>▶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처리량(+) | ▶ 합계출산율(+)<br>▶ 인구 증감률(+)<br>▶ 청년인구 비율(+)<br>▶ 교통접근성(-) |

주: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 각 지표는 특성(순방향·역방향)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 기준으로 선형화 (Min-Max Normalization) 되었으며, 이를 통해 0~1점 범위의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
  - 표준화된 지표에 전문가 가중치\*를 적용하여 20개 지표와 5개 영역의 삶의 질 지수 산출
- \*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통해 영역 및 세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산출
- 표준화 지표의 가중평균으로 영역지수를, 영역별 지수 가중평균으로 종합 지수를 도출하고, 지숫값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00점 만점으로 변환

#### <지수 산출 방법>

\* (예시)경제영역 지수

$$= \{(\text{GRDP}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고용률}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사업체수}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재정자립도} \times \text{지표가중치})\} \times 100$$

\* 종합지수 = (영역별 지수 × 영역가중치)의 합

- 본 지수는 해당 연도의 지역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수치이므로, 연도 간 절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공개) 139개 농어촌 시·군에서 도시형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129개 시·군의 결과**를 유형별(농어촌 군, 도농복합시) 상위 30% 발표

- 농어촌을 포함한 시·군을 **농어촌 군(79개)**과 **일반 도농복합시(50개)**,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로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용인·창원·화성·청주·남양주·천안·김해·평택·포항시)과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도시형 도농복합시**로 분류
  - 도시형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47개 도농복합시와 광역시 내 3개 군(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도농복합시**로 분류

####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개발 및 추진 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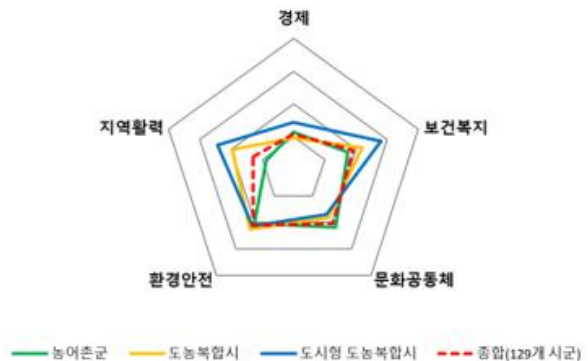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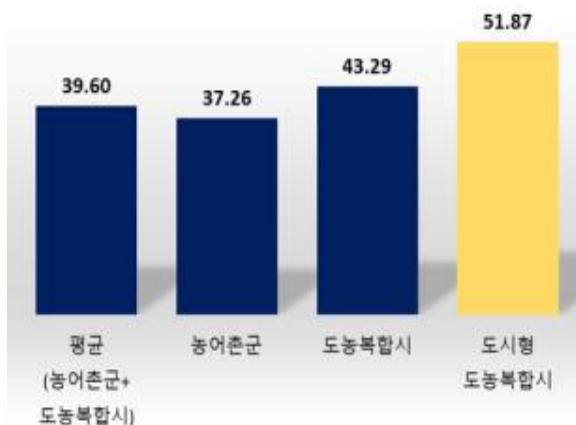
| 년도     | 내용                                                                                                                                                                                                                                                                                                                                                                                                                                                                                                 |
|--------|----------------------------------------------------------------------------------------------------------------------------------------------------------------------------------------------------------------------------------------------------------------------------------------------------------------------------------------------------------------------------------------------------------------------------------------------------------------------------------------------------|
| 20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KREI, KMI) 의견수렴</li> <li>▶ 「농어촌 삶의 질 지표개선 연구」 추진 관련 관계기관 실무 협의(농식품부, 농촌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li> <li>▶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 체계 구축 연구」 용역 추진('22.12.~'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농어촌 관련 경제, 환경, 삶의 질 관련 정책 형한 파악 및 분석</li> <li>-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지수 목표 및 방향 제시, 지수 체계 구축(대분류 8개, 중분류 23개, 세분류 67개 지표 선정 → <b>5개 분류 19개 세부지표</b> 구성)</li> <li>- 농어촌 삶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li> </ul> </li> </ul>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 연구」 용역 추진('23.06.~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안) 중 일부 지표 수정 및 자료 구축(<b>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b> 확정)</li> <li>- AHP 조사를 통한 <b>가중치 설정</b> 및 지표 지수화 시범 추진</li> </ul> </li> <li>▶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전문가 간담회 개최('23.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연구기관, 학계 등 참석</li> </ul> </li> </ul>                                     |
|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관리위원회 구성('24.3.) 및 운영 중('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시범 적용 방안 논의</li> </ul> </li> <li>▶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공표('24.7.5.)</li> <li>▶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지자체 설명회 개최('24.8.26.)</li> </ul>                                                                                                                                                                                                             |

### Ⅲ.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 2025년 4월 기준 공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수 도출

#### 1 종합지수

- (종합)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9.6점이며, 농어촌 군 지역의 종합지수는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경제, 보건·복지, 지역활력 영역에서 우위로 나타남



- 농어촌 군은 경제와 문화·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및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우세
- 도농복합시는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고, 농어촌 군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기반 활동 지표에서 강점

#### < 종합 및 영역별 지수 분포 현황(상위 30위) >

| 구 분   | 종합지수(곳) | 영역별 지수(곳) |        |        |        |        |
|-------|---------|-----------|--------|--------|--------|--------|
|       |         | 경제        | 보건·복지  | 문화·공동체 | 환경·안전  | 지역활력   |
| 농어촌 군 | 8(5)    | 21(20)    | 5(4)   | 24(24) | 13(13) | 2(3)   |
| 도농복합시 | 22(25)  | 9(10)     | 25(26) | 6(6)   | 17(17) | 28(27) |

주: ( )는 전년도 구성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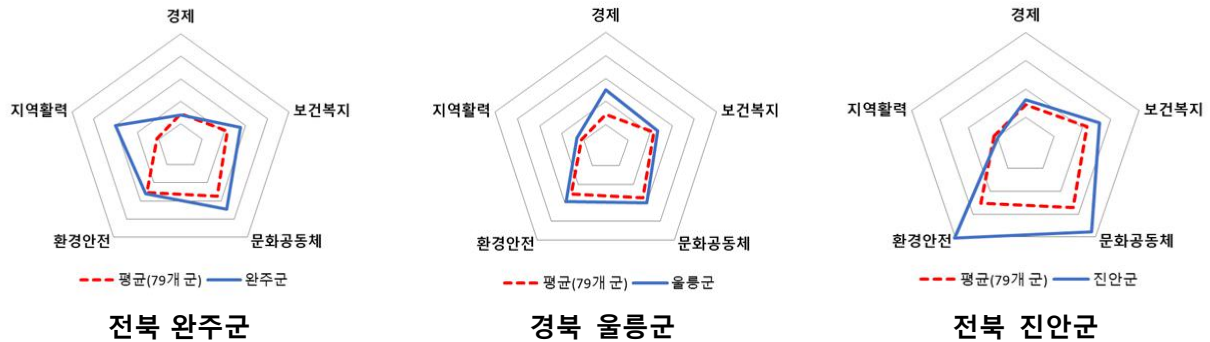
□ (농어촌 군) 경제와 문화·공동체, 지역활력의 일부 지표\*에서 높게 평가

\* 고용률,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합계출산율

○ 농어촌 군의 종합지수 상위권은 전북 완주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순

- 완주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지역활력', 울릉군은 '경제', 진안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상위권 진입

\* 완주군은 전년 대비 **인구증감률** 4.3%p('22) 3% → ('23) 7.3%), **청년인구비율** 0.8%p('22) 20.1% → ('23) 20.9%) 늘었으며, 이는 각 지표별로 농어촌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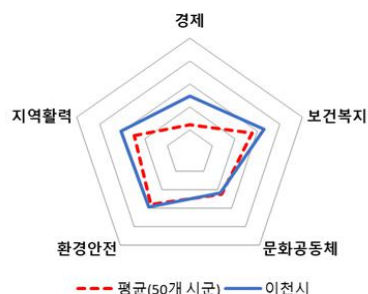
< 농어촌 군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순위(상위30%) >

| 순위 | 종합지수   | 영역별    |        |        |        |        |
|----|--------|--------|--------|--------|--------|--------|
|    |        | 경제     | 보건·복지  | 문화·공동체 | 환경·안전  | 지역활력   |
| 1  | 전북 완주군 | 경북 울릉군 | 경기 양평군 | 전북 진안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완주군 |
| 2  | 경북 울릉군 | 경북 청송군 | 충북 진천군 | 충남 서천군 | 전북 진안군 | 충북 증평군 |
| 3  | 전북 진안군 | 충북 음성군 | 경북 칠곡군 | 전남 무안군 | 충북 보은군 | 전남 무안군 |
| 4  | 강원 화천군 | 충북 진천군 | 충남 홍성군 | 전북 고창군 | 전남 곡성군 | 충남 홍성군 |
| 5  | 충북 진천군 | 전남 신안군 | 전북 완주군 | 강원 횡성군 | 대구 군위군 | 강원 인제군 |
| 6  | 강원 인제군 | 강원 화천군 | 경북 예천군 | 충남 청양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진천군 |
| 7  | 강원 양구군 | 전남 진도군 | 전남 담양군 | 강원 정선군 | 전북 임실군 | 경기 연천군 |
| 8  | 인천 옹진군 | 전북 장수군 | 인천 강화군 | 전북 완주군 | 전북 순창군 | 경기 양평군 |
| 9  | 전북 장수군 | 경남 하동군 | 전북 무주군 | 강원 철원군 | 경북 고령군 | 강원 화천군 |
| 10 | 충남 홍성군 | 대구 군위군 | 전남 장성군 | 충남 홍성군 | 전남 구례군 | 경북 칠곡군 |
| 11 | 전남 담양군 | 경북 영양군 | 전북 진안군 | 전남 곡성군 | 충북 단양군 | 강원 양구군 |
| 12 | 전남 무안군 | 경북 봉화군 | 경북 청송군 | 인천 옹진군 | 충북 영동군 | 전남 영암군 |
| 13 | 전남 곡성군 | 인천 옹진군 | 강원 화천군 | 강원 양구군 | 전남 담양군 | 충남 예산군 |
| 14 | 전북 무주군 | 강원 인제군 | 전남 무안군 | 전남 담양군 | 충북 괴산군 | 강원 철원군 |
| 15 | 충남 청양군 | 전북 무주군 | 강원 양구군 | 전북 순창군 | 경남 하동군 | 전남 화순군 |
| 16 | 충북 증평군 | 경북 청도군 | 경남 함양군 | 전남 영광군 | 인천 옹진군 | 전남 영광군 |
| 17 | 충북 음성군 | 전남 영암군 | 경북 고령군 | 충남 금산군 | 전남 함평군 | 경기 가평군 |
| 18 | 전남 신안군 | 충남 청양군 | 강원 평창군 | 전북 임실군 | 경북 봉화군 | 강원 고성군 |
| 19 | 강원 정선군 | 충남 태안군 | 전남 화순군 | 충북 음성군 | 경북 영양군 | 전남 담양군 |
| 20 | 충남 예산군 | 전남 해남군 | 충남 예산군 | 경북 울릉군 | 전남 장흥군 | 전남 장성군 |
| 21 | 전남 영암군 | 경남 산청군 | 인천 옹진군 | 강원 화천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예천군 |
| 22 | 전남 장성군 | 충남 예산군 | 강원 정선군 | 전남 신안군 | 강원 양구군 | 인천 옹진군 |
| 23 | 경남 하동군 | 강원 평창군 | 충남 태안군 | 충남 부여군 | 전북 무주군 | 충북 음성군 |
| 24 | 경북 청송군 | 강원 정선군 | 경북 의성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의령군 | 경북 울릉군 |
| 25 | 전남 함평군 | 강원 홍천군 | 충북 옥천군 | 전북 무주군 | 경북 청송군 | 강원 양양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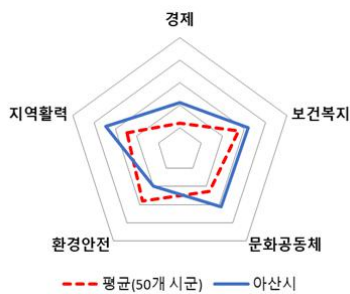
- 전년대비 상위 30%에 신규 진입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경남 하동군, 경북 청송군, 전남 함평군 6곳

□ (도농복합시) 보건·복지,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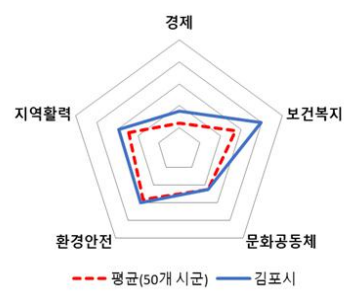
-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이천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순
  - 세 지역 모두 '경제, 지역활력'에서 상위권이며, 이 중 이천시와 김포시는 '보건·복지', 아산시는 '문화·공동체'에서 높은 순위
  - 반면, 경기 이천시와 김포시는 '문화·공동체', 충남 아산시는 '환경·안전'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수치가 낮아 균형적인 분포에서 벗어나는 양상



경기 이천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경기 안성시, 전남 나주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4곳

< 도농복합시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순위(상위30%) >

| 순위 | 종합지수   | 영역별     |        |         |        |        |
|----|--------|---------|--------|---------|--------|--------|
|    |        | 경제      | 보건·복지  | 문화·공동체  | 환경·안전  | 지역활력   |
| 1  | 경기 이천시 | 경기 이천시  | 경기 김포시 | 충남 계룡시  | 경북 문경시 | 경기 양주시 |
| 2  | 충남 아산시 | 충남 서산시  | 경기 광주시 | 전북 정읍시  | 충남 계룡시 | 충남 계룡시 |
| 3  | 경기 김포시 | 충남 당진시  | 경기 파주시 | 충남 아산시  | 전북 남원시 | 충남 아산시 |
| 4  | 전남 광양시 | 충남 아산시  | 대구 달성군 | 전남 광양시  | 충남 보령시 | 경기 이천시 |
| 5  | 충남 계룡시 | 전남 광양시  | 충남 계룡시 | 전남 순천시  | 전남 나주시 | 전남 광양시 |
| 6  | 충남 서산시 | 제주 서귀포시 | 강원 원주시 | 전북 남원시  | 전북 김제시 | 경북 구미시 |
| 7  | 충남 당진시 | 전남 여주시  | 경기 이천시 | 제주 서귀포시 | 경기 양주시 | 강원 춘천시 |
| 8  | 경기 파주시 | 제주 제주시  | 전남 순천시 | 전북 익산시  | 경기 여주시 | 경북 경산시 |
| 9  | 경기 양주시 | 경기 김포시  | 경북 구미시 | 전남 나주시  | 충북 제천시 | 경기 김포시 |
| 10 | 경기 광주시 | 경기 광주시  | 강원 춘천시 | 충북 제천시  | 경북 영주시 | 대구 달성군 |
| 11 | 전남 여주시 | 경기 파주시  | 충남 아산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논산시 | 전남 순천시 |
| 12 | 경기 안성시 | 경기 안성시  | 경기 양주시 | 경기 여주시  | 경북 안동시 | 강원 원주시 |
| 13 | 전남 나주시 | 울산 울주군  | 경남 진주시 | 강원 춘천시  | 경북 영천시 | 경기 파주시 |
| 14 | 강원 춘천시 | 경북 구미시  | 충남 서산시 | 전북 군산시  | 경북 김천시 | 경남 진주시 |
| 15 | 전남 순천시 | 경북 영천시  | 부산 기장군 | 강원 강릉시  | 강원 삼척시 | 경남 양산시 |

## 참 고

## 영역별 삶의 질 지표 통계 비교

### 1. 영역별 지표별 평균값 비교

| 구분 |              | 1인당 지역내<br>총생산(천 원) | 고용률(%) |       | 사업체수(개소) |        | 재정자립도(%) |       |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경제 | 농어촌 군        | 40,386              | 69.4   | 70.1  | 1,870    | 1,907  | 10.4     | 10.5  |
|    | 도농복합시        | 45,182              | 62.5   | 63.4  | 8,604    | 8,691  | 20.3     | 20.5  |
|    | 도시형<br>도농복합시 | 45,130              | 61.8   | 62.6  | 28,306   | 28,645 | 38.4     | 38.9  |

| 구분        |              | 자살사망률(%) |       | 기대수명(세) |       | 긴급복지지원율<br>(%) |       | 보건복지예산<br>비율(%) |       |
|-----------|--------------|----------|-------|---------|-------|----------------|-------|-----------------|-------|
|           |              | 2022년    | 2023년 | 2021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1년           | 2022년 |
| 보건·<br>복지 | 농어촌 군        | 23.7     | 25.3  | 83.0    | 83.1  | 5.9            | 6.0   | 20.4            | 20.1  |
|           | 도농복합시        | 23.5     | 25.4  | 83.6    | 83.7  | 5.2            | 5.4   | 28.9            | 29.4  |
|           | 도시형<br>도농복합시 | 21.7     | 23.4  | 84.1    | 84.4  | 3.3            | 3.5   | 34.1            | 36.3  |

| 구분         |              | 삶의 만족도<br>(점) |       | 문화시설접근성<br>(분) |       | 사회활동 참여율<br>(%) | 가족관계만족도<br>(%) |       |
|------------|--------------|---------------|-------|----------------|-------|-----------------|----------------|-------|
|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0년           | 2022년          | 2023년 |
| 문화·<br>공동체 | 농어촌 군        | 6.5           | 6.5   | 26.1           | 26.3  | 33.5            | 76.3           | 78.0  |
|            | 도농복합시        | 6.3           | 6.3   | 22.2           | 22.1  | 30.7            | 74.4           | 75.6  |
|            | 도시형<br>도농복합시 | 6.2           | 6.2   | 17.8           | 18.2  | 30.2            | 73.0           | 73.6  |

| 구분        |              | 빈집률(%) |       | 지역안전도<br>(등급) |       | 하수도보급률<br>(%) |       | 주민 1인당<br>생활계 폐기물<br>처리량(톤/인) |       |
|-----------|--------------|--------|-------|---------------|-------|---------------|-------|-------------------------------|-------|
|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1년                         | 2023년 |
| 환경·<br>안전 | 농어촌 군        | 14.1   | 14.4  | 2.9           | 2.9   | 71.6          | 72.7  | 1.6                           | 1.6   |
|           | 도농복합시        | 11.4   | 11.5  | 2.9           | 2.8   | 86.6          | 87.8  | 1.5                           | 1.4   |
|           | 도시형<br>도농복합시 | 7.6    | 7.8   | 3.2           | 3.4   | 93.5          | 94.7  | 1.2                           | 1.3   |

| 구분       |              | 합계출산율(명) |       | 인구증감률(%) |       | 청년인구 비율<br>(%) |       | 교통접근성(분) |       |
|----------|--------------|----------|-------|----------|-------|----------------|-------|----------|-------|
|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1년    | 2022년 |
| 지역<br>활력 | 농어촌 군        | 1.0      | 1.0   | 0.5      | 0.3   | 16.0           | 15.5  | 100.1    | 104.8 |
|          | 도농복합시        | 1.0      | 0.9   | 1.3      | 1.2   | 22.2           | 21.6  | 34.6     | 41.0  |
|          | 도시형<br>도농복합시 | 0.9      | 0.8   | 1.9      | 1.4   | 26.8           | 26.2  | 19.4     | 26.4  |

주: 지표별 연도는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 사용된 각 지표의 통계자료 기준연도임

## 2. 영역별 지표별 최소-최대값 분포(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 구분 |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천 원) |         | 고용률(%) |       | 사업체수(개소) |        | 재정자립도(%) |      |
|----|-----------|------------------|---------|--------|-------|----------|--------|----------|------|
|    |           | 최소               | 최대      | 최저     | 최고    | 최소       | 최대     | 최저       | 최고   |
| 경제 | 농어촌 군     | 21,415           | 91,644  | 56.8   | 82.1  | 476      | 6,531  | 6.2      | 26.4 |
|    | 도농복합시     | 23,314           | 124,430 | 57.1   | 72.1  | 1,157    | 25,806 | 8.4      | 43.9 |
|    | 도시형 도농복합시 | 18,359           | 100,445 | 59.1   | 67.35 | 12,854   | 51,088 | 25.4     | 61.1 |

| 구분    |           | 자살사망률(%) |      | 기대수명(세) |      | 긴급복지지원율(%) |      | 보건복지예산 비율(%) |      |
|-------|-----------|----------|------|---------|------|------------|------|--------------|------|
|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소         | 최대   | 최저           | 최고   |
| 보건·복지 | 농어촌 군     | 5.2      | 55.8 | 81.5    | 85.8 | 3.0        | 8.6  | 9.1          | 32.6 |
|       | 도농복합시     | 16.7     | 35.8 | 82.3    | 85.4 | 2.5        | 10.4 | 16.5         | 43.2 |
|       | 도시형 도농복합시 | 18.3     | 31.4 | 83.4    | 86.4 | 1.8        | 6.2  | 28.5         | 46.0 |

| 구분     |           | 삶의 만족도(점) |      | 문화시설접근성(분) |      | 사회활동 참여율(%) |      | 가족관계만족도(%) |      |
|--------|-----------|-----------|------|------------|------|-------------|------|------------|------|
|        |           | 최저        | 최고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저         | 최고   |
| 문화·공동체 | 농어촌 군     | 6.0       | 7.34 | 7.2        | 71.3 | 22.9        | 46.0 | 55.3       | 92.9 |
|        | 도농복합시     | 5.7       | 6.97 | 6.8        | 37.3 | 23.6        | 39.7 | 63.2       | 88.9 |
|        | 도시형 도농복합시 | 5.8       | 6.7  | 11.1       | 29.3 | 27.5        | 35.4 | 67         | 79.7 |

| 구분    |           | 빈집률(%) |      | 지역안전도(등급) |    | 하수도보급률(%) |      |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톤/인) |     |
|-------|-----------|--------|------|-----------|----|-----------|------|-------------------------|-----|
|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환경·안전 | 농어촌 군     | 4.9    | 25.1 | 5         | 1  | 8.8       | 97.9 | 0.8                     | 5.2 |
|       | 도농복합시     | 4.3    | 17.7 | 5         | 1  | 65.3      | 98.6 | 0.9                     | 2.4 |
|       | 도시형 도농복합시 | 3.7    | 12.8 | 5         | 1  | 87.1      | 98.1 | 0.8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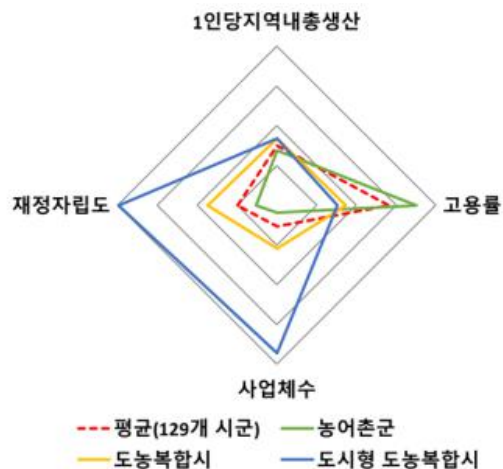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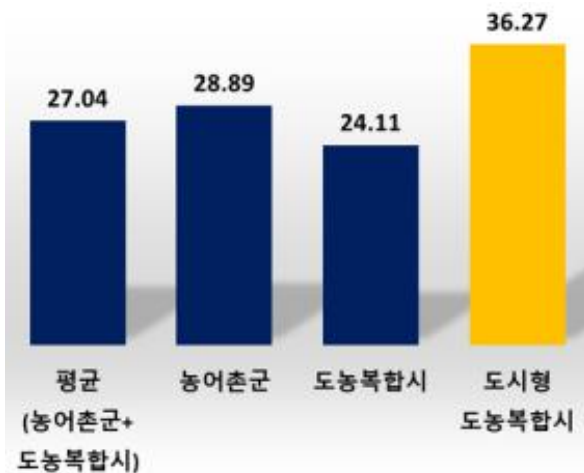
| 구분    |           | 합계출산율(명) |     | 인구증감률(%) |      | 청년인구 비율(%) |      | 교통접근성(분) |       |
|-------|-----------|----------|-----|----------|------|------------|------|----------|-------|
|       |           | 최저       | 최고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지역 활력 | 농어촌 군     | 0.5      | 1.7 | -1.4     | 7.3  | 10.6       | 25.1 | 45.7     | 120.0 |
|       | 도농복합시     | 0.7      | 1.4 | -0.8     | 10.5 | 15.0       | 27.7 | 21.8     | 88.2  |
|       | 도시형 도농복합시 | 0.7      | 1.0 | 0.1      | 4.3  | 21.9       | 29.6 | 22.8     | 33.7  |



## 2 영역별 지수

### 1 경제 영역

- 경제 영역은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와 활력도를 보여주는 지표(GRDP, 고용률, 사업체수, 재정자립도)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평균 28.89점)이 도농복합시(24.11점)보다 높게 산출되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36.27점
  - 도농복합시는 농어촌 군에 비해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고용률이 낮게 산출되며, 도시형에 비해서는 사업체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지수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전년도와 함께 **GRDP,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등 산업 기반 지표에서 도농복합시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수준 유지
  - 사업체 수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농어촌 군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
    - \* 사업체 수(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1,157개/476개 (최대) 25,806개/6,531개
  - 재정자립도는 세입 구조 차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
    - \* 재정자립도(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저) 8.4%/6.2% (최고) 43.9%/26.4%



□ (농어촌 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충북 음성군 순으로 높은 순위

○ 경북 울릉군과 청송군은 ‘고용률’, 충북 음성군은 ‘GRDP·사업체수·재정자립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경북 청도군, 충남 예산군, 강원 평창군·정선군 4곳

< 농어촌 군 경제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경제영역   | 1인당<br>지역 내 총생산 | 고용률    | 사업체수   | 재정자립도  |
|----|--------|-----------------|--------|--------|--------|
| 1  | 경북 울릉군 | 충북 음성군          | 경북 울릉군 | 충북 음성군 | 충북 진천군 |
| 2  | 경북 청송군 | 충북 진천군          | 경북 청송군 | 경북 철곡군 | 충북 음성군 |
| 3  | 충북 음성군 | 강원 화천군          | 전남 신안군 | 경남 함안군 | 경기 가평군 |
| 4  | 충북 진천군 | 경남 함안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완주군 | 경기 양평군 |
| 5  | 전남 신안군 | 경북 성주군          | 전남 진도군 | 경기 양평군 | 경북 철곡군 |
| 6  | 강원 화천군 | 전남 영암군          | 경북 영양군 | 충남 홍성군 | 전북 완주군 |
| 7  | 전남 진도군 | 강원 인제군          | 전북 무주군 | 경기 가평군 | 충북 증평군 |
| 8  | 전북 장수군 | 경북 고령군          | 경북 청도군 | 충북 진천군 | 경남 함안군 |
| 9  | 경남 하동군 | 전북 완주군          | 대구 군위군 | 전남 무안군 | 경기 연천군 |
| 10 | 대구 군위군 | 강원 철원군          | 경북 봉화군 | 충남 예산군 | 전남 화순군 |
| 11 | 경북 영양군 | 강원 양구군          | 경남 산청군 | 전남 영암군 | 충남 홍성군 |
| 12 | 경북 봉화군 | 전남 장성군          | 경남 하동군 | 전남 해남군 | 전남 무안군 |
| 13 | 인천 옹진군 | 충남 예산군          | 전북 진안군 | 경북 성주군 | 경남 창녕군 |
| 14 | 강원 인제군 | 강원 고성군          | 전남 해남군 | 전남 화순군 | 강원 정선군 |
| 15 | 전북 무주군 | 인천 옹진군          | 강원 화천군 | 강원 홍천군 | 인천 강화군 |
| 16 | 경북 청도군 | 경남 하동군          | 인천 옹진군 | 충남 금산군 | 충남 태안군 |
| 17 | 전남 영암군 | 충남 서천군          | 전남 보성군 | 인천 강화군 | 충남 예산군 |
| 18 | 충남 청양군 | 대구 군위군          | 경북 의성군 | 전남 장성군 | 강원 홍천군 |
| 19 | 충남 태안군 | 경남 창녕군          | 충남 청양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영광군 |
| 20 | 전남 해남군 | 경남 고성군          | 경남 남해군 | 경북 고령군 | 경북 성주군 |
| 21 | 경남 산청군 | 경기 연천군          | 전남 장흥군 | 경남 창녕군 | 경북 울릉군 |
| 22 | 충남 예산군 | 경북 울진군          | 전남 함평군 | 충남 태안군 | 강원 평창군 |
| 23 | 강원 평창군 | 경북 봉화군          | 전북 부안군 | 충북 옥천군 | 강원 영월군 |
| 24 | 강원 정선군 | 경북 울릉군          | 강원 인제군 | 전남 영광군 | 충북 단양군 |
| 25 | 강원 홍천군 | 충북 단양군          | 강원 평창군 | 전남 고흥군 | 충남 금산군 |

## [경북 청도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2024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8천만 원 투입)
  - 지역자원을 창업 아이템으로 연계하여 제품 개발 및 브랜드 런칭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 운영까지 확대 지원
- 2025년 ‘054스페이스 조성 사업’ 등 추진
  - 전통시장 일원에 ‘054스페이스’ 조성(창업 실험실, 팝업스토어 등 운영)
  - 기존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입주기업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 지원)
  - 지역활력타운 내 ‘취·창업지원센터’ 및 ‘워케이션 공간’ 설치 추진
  - 직장적응지원 사업,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 추진

자료: “청도군 2024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 창출 우수상”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12/202412251540405317e594bd8e46\\_1](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12/202412251540405317e594bd8e46_1), 2025.4.28. 검색), “청도군, 2025년 청년 정책 확 달라진다”(경상매일신문,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524827>, 2025.4.29. 검색)

## □ (도농복합시) 경기 이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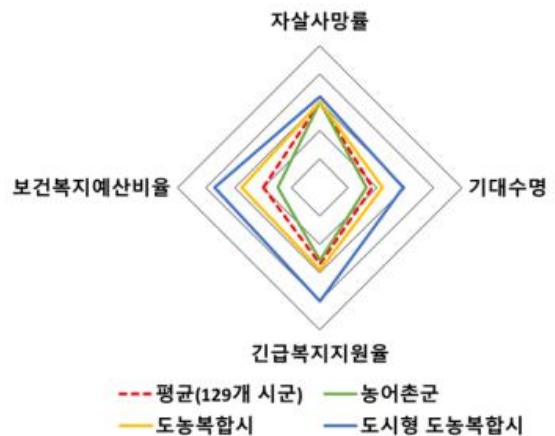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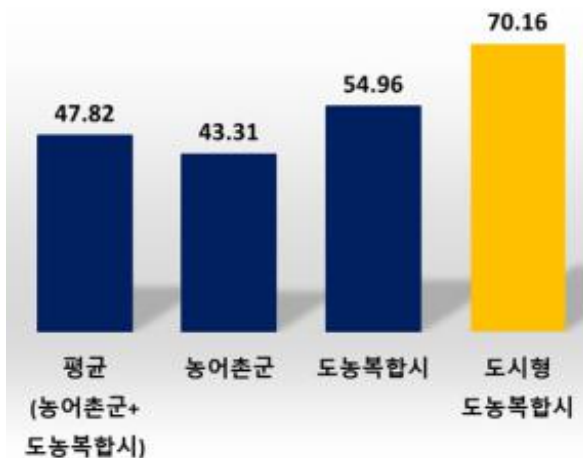
- 경기 이천시는 ‘GRDP·재정자립도’,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는 ‘GRDP·고용률’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경북 영천시 1곳

### < 도농복합시 경제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경제영역    | 1인당<br>지역 내 총생산 | 고용률     | 사업체수   | 재정자립도   |
|----|---------|-----------------|---------|--------|---------|
| 1  | 경기 이천시  | 경기 이천시          | 제주 서귀포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이천시  |
| 2  | 충남 서산시  | 전남 여수시          | 충남 당진시  | 제주 제주시 | 경기 김포시  |
| 3  | 충남 당진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서산시  | 경기 파주시 | 경기 광주시  |
| 4  | 충남 아산시  | 울산 울주군          | 경북 영천시  | 경기 광주시 | 충남 아산시  |
| 5  | 전남 광양시  | 전남 광양시          | 전남 광양시  | 충남 아산시 | 제주 제주시  |
| 6  | 제주 서귀포시 | 충남 아산시          | 제주 제주시  | 경북 구미시 | 제주 서귀포시 |
| 7  | 전남 여수시  | 충남 당진시          | 전북 김제시  | 강원 원주시 | 울산 울주군  |
| 8  | 제주 제주시  | 경북 구미시          | 경북 상주시  | 경남 양산시 | 경기 파주시  |
| 9  | 경기 김포시  | 경기 파주시          | 전북 정읍시  | 경남 진주시 | 경기 안성시  |
| 10 | 경기 광주시  | 경기 안성시          | 전북 남원시  | 강원 춘천시 | 대구 달성군  |
| 11 | 경기 파주시  | 경기 포천시          | 전남 나주시  | 전남 여수시 | 경북 구미시  |
| 12 | 경기 안성시  | 전남 나주시          | 경남 사천시  | 경기 양주시 | 전남 여수시  |
| 13 | 울산 울주군  | 경북 경주시          | 경북 김천시  | 경기 포천시 | 경기 양주시  |
| 14 | 경북 구미시  | 강원 삼척시          | 충남 논산시  | 경북 경주시 | 부산 기장군  |
| 15 | 경북 영천시  | 경북 영천시          | 충남 아산시  | 전북 익산시 | 경남 양산시  |

## 2 보건·복지 영역

- 보건·복지 영역은 주민 건강 상태와 사회적 안전망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43.31점, 도농복합시는 54.96점으로 산출되었으며, 도시형은 70.16점
- 보건복지예산은 도시지역이나 도시와 인접한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성
  - 지역별 복지 재정 투입 수준의 차이로 지역 간 보건복지예산비율의 편차가 큰 편
- \* **보건복지예산비율**(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저**) 16.5%/9.1% (**최고**) 43.2%/32.6%



- **(농어촌 군)** 경기 양평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순으로 상위권
- 경기 양평군은 모든 지표에서, 충북 진천군은 '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경북 칠곡군은 '보건복지예산비율'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강원 화천군·양구군·평창군, 경남 함양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의성군, 전남 화순군, 전북 무주군·진안군 10곳
- **(도농복합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순으로 높은 순위
- 경기 김포시와 광주시는 '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경기 파주시는 '보건복지예산비율'에서 상위권
  - \* 광주시는 전년 대비 **보건복지비율**이 6.6%p('22) 29.8% → ('23) 36.4%) 늘면서, 전년대비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의 예산 점유가 확대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강원 춘천시, 경남 진주시 2곳

**< 농어촌 군 보건·복지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보건복지영역 | 자살사망률  | 기대수명   | 긴급복지지원율 | 보건복지<br>예산비율 |
|----|--------|--------|--------|---------|--------------|
| 1  | 경기 양평군 | 전북 진안군 | 경북 울릉군 | 인천 옹진군  | 경북 칠곡군       |
| 2  | 충북 진천군 | 경남 함양군 | 전북 완주군 | 충북 진천군  | 경기 가평군       |
| 3  | 경북 칠곡군 | 전북 무주군 | 전남 담양군 | 강원 평창군  | 경기 양평군       |
| 4  | 충남 홍성군 | 전남 장성군 | 충남 태안군 | 전남 무안군  | 충남 홍성군       |
| 5  | 전북 완주군 | 전북 장수군 | 인천 강화군 | 전남 영암군  | 충북 옥천군       |
| 6  | 경북 예천군 | 경남 하동군 | 충남 홍성군 | 경북 울릉군  | 충북 음성군       |
| 7  | 전남 담양군 | 경북 고령군 | 전남 곡성군 | 강원 인제군  | 전북 완주군       |
| 8  | 인천 강화군 | 강원 양구군 | 인천 옹진군 | 강원 횡성군  | 경북 의성군       |
| 9  | 전북 무주군 | 경북 영양군 | 경북 예천군 | 충북 음성군  | 강원 정선군       |
| 10 | 전남 장성군 | 강원 화천군 | 전북 임실군 | 강원 홍천군  | 충북 증평군       |
| 11 | 전북 진안군 | 경북 의성군 | 전북 진안군 | 경기 양평군  | 충북 진천군       |
| 12 | 경북 청송군 | 경기 양평군 | 경기 양평군 | 충남 홍성군  | 경남 창녕군       |
| 13 | 강원 화천군 | 경남 의령군 | 전북 장수군 | 충남 청양군  | 인천 강화군       |
| 14 | 전남 무안군 | 경북 청송군 | 경남 거창군 | 강원 철원군  | 충남 금산군       |
| 15 | 강원 양구군 | 전남 곡성군 | 경남 하동군 | 충남 예산군  | 경남 함안군       |
| 16 | 경남 함양군 | 경북 예천군 | 경북 청송군 | 충남 태안군  | 충남 서천군       |
| 17 | 경북 고령군 | 전북 고창군 | 전남 구례군 | 강원 화천군  | 경북 예천군       |
| 18 | 강원 평창군 | 충북 진천군 | 전북 무주군 | 강원 고성군  | 충남 태안군       |
| 19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강진군 | 강원 양구군  | 충남 부여군       |
| 20 | 충남 예산군 | 전북 완주군 | 충북 진천군 | 강원 영월군  | 전남 영광군       |
| 21 | 인천 옹진군 | 경북 영덕군 | 강원 양양군 | 강원 정선군  | 전남 무안군       |
| 22 | 강원 정선군 | 경남 합천군 | 강원 평창군 | 충북 증평군  | 전남 고흥군       |
| 23 | 충남 태안군 | 경북 울진군 | 전남 화순군 | 대구 군위군  | 전남 화순군       |
| 24 | 경북 의성군 | 경북 칠곡군 | 경남 산청군 | 전남 장성군  | 경남 고성군       |
| 25 | 충북 옥천군 | 전남 강진군 | 전북 부안군 | 경북 칠곡군  | 경남 남해군       |

**< 도농복합시 보건·복지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보건복지영역 | 자살사망률  | 기대수명    | 긴급복지지원율 | 보건복지<br>예산비율 |
|----|--------|--------|---------|---------|--------------|
| 1  | 경기 김포시 | 경북 상주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파주시       |
| 2  | 경기 광주시 | 전북 정읍시 | 충남 계룡시  | 충남 계룡시  | 강원 원주시       |
| 3  | 경기 파주시 | 전북 김제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서산시  | 경기 김포시       |
| 4  | 대구 달성군 | 경남 진주시 | 제주 서귀포시 | 경기 김포시  | 부산 기장군       |
| 5  | 충남 계룡시 | 경북 영천시 | 전남 순천시  | 경기 이천시  | 대구 달성군       |
| 6  | 강원 원주시 | 전남 순천시 | 제주 제주시  | 충남 당진시  | 경기 양주시       |
| 7  | 경기 이천시 | 전북 남원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안성시  | 전북 익산시       |
| 8  | 전남 순천시 | 대구 달성군 | 전남 광양시  | 충남 아산시  | 강원 춘천시       |
| 9  | 경북 구미시 | 부산 기장군 | 전북 남원시  | 경북 구미시  | 경기 광주시       |
| 10 | 강원 춘천시 | 경북 문경시 | 강원 춘천시  | 울산 울주군  | 경북 경산시       |
| 11 | 충남 아산시 | 전남 여주시 | 충남 당진시  | 전남 광양시  | 경남 양산시       |
| 12 | 경기 양주시 | 경기 여주시 | 경기 파주시  | 전남 순천시  | 전북 군산시       |
| 13 | 경남 진주시 | 경기 김포시 | 경북 구미시  | 경남 거제시  | 경북 구미시       |
| 14 | 충남 서산시 | 전남 광양시 | 강원 원주시  | 경기 파주시  | 강원 강릉시       |
| 15 | 부산 기장군 | 경북 영주시 | 경남 진주시  | 경북 경산시  | 경남 진주시       |

### ③ 문화·공동체 영역

□ 문화·공동체는 주민의 주관적 만족감과 지역 내 사회적 관계 형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삶의만족도, 문화시설접근성, 사회활동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54.43점, 도농복합시 45.33점이며, 도시형은 42.3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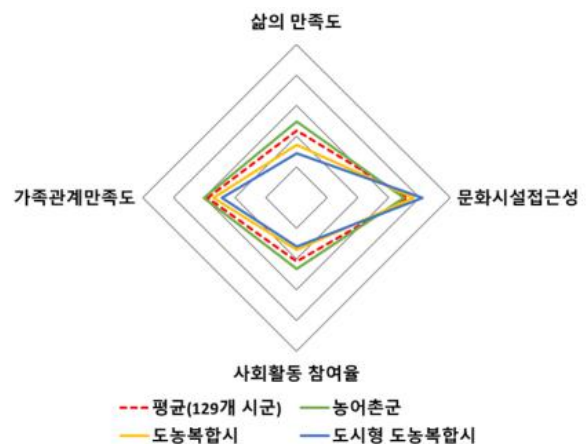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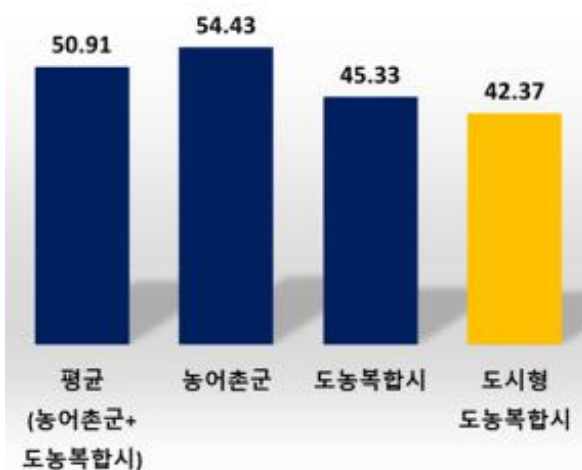
○ 농어촌 군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도농복합시는 문화시설접근성이 용이

- 문화시설접근성은 두 유형 모두 최소 소요 시간은 유사하나, 최대 시간에서 농어촌 군 지역이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지역 간 편차 존재

\* 문화시설접근성(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6.8분/7.2분 (최대) 37.3분/71.3분

- 일부 지역은 도시형 도농복합시보다 문화시설접근성이 양호

\* 도시형 도농복합시 문화시설접근성 (최소) 11.1분 (최대) 29.3분



□ (농어촌 군) 전북 진안군, 충남 서천군, 전남 무안군 순으로 상위권

○ 전북 진안군과 전남 무안군은 '삶의만족도·사회활동참여율', 충남 서천군은 '삶의 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북 진안군·고창군·완주군·임실군, 강원 정선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충남 금산군, 충북 음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11곳

< 농어촌 군 문화·공동체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문화·공동체<br>영역 | 삶의 만족도 | 문화시설접근성 | 사회활동 참여율 | 가족관계만족도 |
|----|--------------|--------|---------|----------|---------|
| 1  | 전북 진안군       | 인천 옹진군 | 충북 증평군  | 충남 청양군   | 인천 강화군  |
| 2  | 충남 서천군       | 전북 진안군 | 강원 고성군  | 충남 부여군   | 전북 고창군  |
| 3  | 전남 무안군       | 강원 횡성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신안군   | 충남 서천군  |
| 4  | 전북 고창군       | 강원 정선군 | 경북 칠곡군  | 강원 양구군   | 충북 음성군  |
| 5  | 강원 횡성군       | 전남 무안군 | 충북 진천군  | 경남 남해군   | 전북 완주군  |
| 6  | 충남 청양군       | 강원 철원군 | 강원 철원군  | 전북 무주군   | 충남 홍성군  |
| 7  | 강원 정선군       | 전남 곡성군 | 경북 고령군  | 전남 장흥군   | 경북 영덕군  |
| 8  | 전북 완주군       | 전남 담양군 | 충남 예산군  | 전남 영광군   | 전북 순창군  |
| 9  | 강원 철원군       | 전북 고창군 | 경남 함안군  | 전남 구례군   | 충북 증평군  |
| 10 | 충남 홍성군       | 충남 서천군 | 충남 홍성군  | 충남 홍성군   | 강원 영월군  |
| 11 | 전남 곡성군       | 전북 완주군 | 전북 완주군  | 전북 진안군   | 충북 괴산군  |
| 12 | 인천 옹진군       | 전남 신안군 | 강원 양구군  | 전남 곡성군   | 강원 횡성군  |
| 13 | 강원 양구군       | 전남 고흥군 | 전남 장성군  | 전남 무안군   | 충남 청양군  |
| 14 | 전남 담양군       | 경기 가평군 | 경북 성주군  | 전북 장수군   | 경북 칠곡군  |
| 15 | 전북 순창군       | 전북 임실군 | 충남 청양군  | 경북 울릉군   | 경기 양평군  |
| 16 | 전남 영광군       | 충북 음성군 | 충남 서천군  | 충남 서천군   | 충남 부여군  |
| 17 | 충남 금산군       | 전남 영광군 | 충남 금산군  | 전남 함평군   | 강원 평창군  |
| 18 | 전북 임실군       | 경남 의령군 | 전남 영광군  | 충남 태안군   | 충남 금산군  |
| 19 | 충북 음성군       | 전남 보성군 | 전남 진도군  | 경남 하동군   | 강원 인제군  |
| 20 | 경북 울릉군       | 전남 장성군 | 강원 양양군  | 경북 성주군   | 경북 영양군  |
| 21 | 강원 화천군       | 전북 순창군 | 경북 영덕군  | 경남 거창군   | 충북 진천군  |
| 22 | 전남 신안군       | 강원 양구군 | 전남 강진군  | 강원 영월군   | 강원 화천군  |
| 23 | 충남 부여군       | 강원 화천군 | 전남 영암군  | 강원 평창군   | 강원 양양군  |
| 24 | 경남 의령군       | 충남 금산군 | 충북 보은군  | 강원 철원군   | 전북 임실군  |
| 25 | 전북 무주군       | 전북 무주군 | 전남 함평군  | 전남 해남군   | 경북 의성군  |

**[전북 진안군: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상생]**

-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친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 가족사업 통합 및 주민 참여 소통 공간 조성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마련
-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주민주도 상생사업 추진
  - 진안고원치유숲, 전북자치도 치유관광지 선정(24) 및 체류형 관광 유도(진안고원 마이스테이, 4색에너지 충전소 조성 추진 등)
  -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진안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진안군청, <https://www.jinan.go.kr>), “진안군 전역으로 퍼지는 선순환 경제구조 만든다”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30117580091>, 2025.4.29. 검색)

- (도농복합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충남 아산시 순으로 높은 순위
- 충남 계룡시는 모든 영역에서, 전북 정읍시는 ‘삶의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충남 아산시는 ‘삶의 만족도·문화시설접근성·가족관계만족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북 남원시·익산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경기 여주시, 강원 춘천시 6곳

< 도농복합시 문화·공동체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문화·공동체<br>영역 | 삶의 만족도  | 문화시설접근성 | 사회활동 참여율 | 가족관계만족도 |
|----|--------------|---------|---------|----------|---------|
| 1  | 충남 계룡시       | 충남 계룡시  | 충남 계룡시  | 제주 서귀포시  | 전북 남원시  |
| 2  | 전북 정읍시       | 전북 정읍시  | 경기 양주시  | 전남 광양시   | 충북 제천시  |
| 3  | 충남 아산시       | 전남 순천시  | 대구 달성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정읍시  |
| 4  | 전남 광양시       | 충남 아산시  | 경기 파주시  | 충남 공주시   | 제주 서귀포시 |
| 5  | 전남 순천시       | 전남 광양시  | 경남 통영시  | 제주 제주시   | 전북 익산시  |
| 6  | 전북 남원시       | 전남 나주시  | 경북 구미시  | 전남 나주시   | 경북 상주시  |
| 7  | 제주 서귀포시      | 경기 여주시  | 충남 아산시  | 충남 서산시   | 경북 경산시  |
| 8  | 전북 익산시       | 대구 달성군  | 경기 김포시  | 충남 계룡시   | 강원 삼척시  |
| 9  | 전남 나주시       | 전남 여수시  | 경기 광주시  | 강원 강릉시   | 충남 아산시  |
| 10 | 충북 제천시       | 전북 남원시  | 전북 군산시  | 충남 당진시   | 충남 계룡시  |
| 11 | 충남 서산시       | 전북 익산시  | 부산 기장군  | 전북 정읍시   | 전북 김제시  |
| 12 | 경기 여주시       | 제주 서귀포시 | 전남 광양시  | 전북 김제시   | 경북 김천시  |
| 13 | 강원 춘천시       | 강원 춘천시  | 강원 춘천시  | 경북 경주시   | 강원 강릉시  |
| 14 | 전북 군산시       | 강원 삼척시  | 전북 김제시  | 충남 논산시   | 충남 당진시  |
| 15 | 강원 강릉시       | 충남 서산시  | 경기 안성시  | 전북 군산시   | 경기 김포시  |

[전북 남원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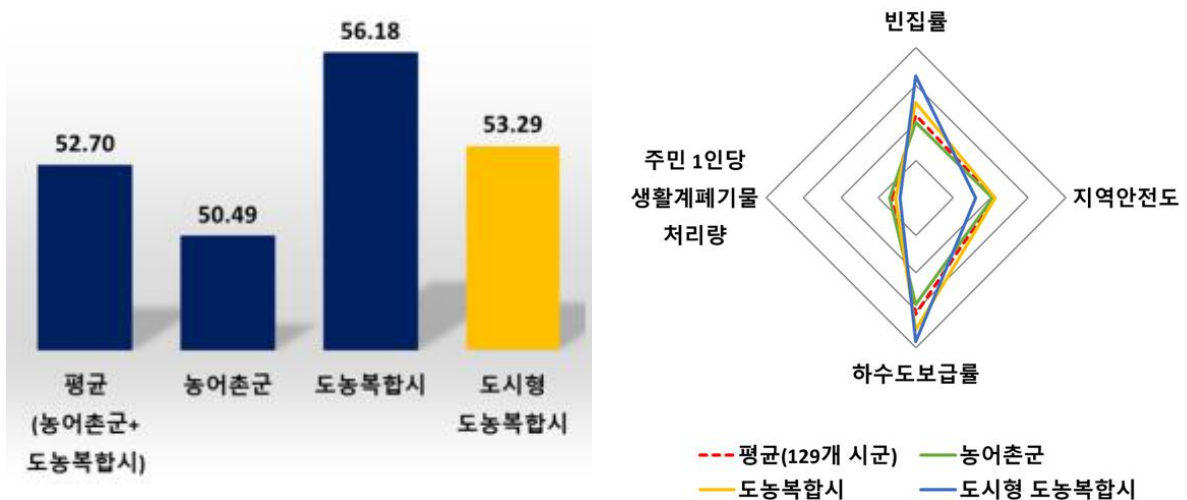
- 폐산업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달빛정원’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조성
  - 지역민 주도의 창작 활동 제공 및 관광자원 개발, 열린 문화 쉼터 제공 등
-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추진 중
  - 함파우 유원지 일대를 자연과 예술, 문화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자원과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 기대

자료: “남원시,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 ‘달빛정원’ 개관 예정” (아시아뉴스전북,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97>, 2025.4.28. 검색), “울곧게 피어나다 - 전북 남원-” (지역문화진흥원 웹진 49호 2024.10., [https://roda.or.kr/webzine/202410/detail\\_point1.jsp](https://roda.or.kr/webzine/202410/detail_point1.jsp), 2025.4.29. 검색)



#### 4 환경·안전 영역

- 지역 주민이 거주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빈집,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생활계폐기물처리량)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50.49점, 도농복합시 56.18점이며, 도시형은 53.29점
  - 도농복합시는 인프라 및 환경 지표에서 도시형에 비해 낮았으나, 지역 안전등급에서의 상대적 우위가 이를 상쇄하여 영역 지수가 높게 산출
  - \* 지역안전등급(평균): (도시형 도농복합시) 3.4 < (군) 2.9 < (도농복합시) 2.8
- 생활환경 관련 지표인 빈집\*과 하수도보급률\*\*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
  - \* 지역유형별 빈집률(%): (도시형 도농복합시) 7.8 < (도농복합시) 11.5 < (군) 14.4
  - \*\* 지역유형별 하수도보급률(%): (군) 72.7 < (도농복합시) 87.8 < (도시형 도농복합시) 94.7
  - 특히, 하수도보급률에서 농어촌 군은 하한선이 매우 낮아, 기초 생활 기반 격차가 크게 발생
  - \* 하수도보급률(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저) 65.3%/8.8% (최고) 98.6%/97.9%



- (농어촌 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충북 보은군 순으로 상위권
- 전북 장수군과 진안군은 '빈집률·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에서, 충북 보은군은 '지역안전도'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남 구례군·신안군, 충북 단양군, 경남 하동군, 인천 용진군, 경북 청송군 6곳

## [전남 구례군: 지역 안전을 위한 정책 사업]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도입으로 지역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 강화

- 군청 관제실에 통합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법, 교통, 재난 등 안전 정보 통합 관리
-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청, 소방청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골든타임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자료: “구례군, 신속하게 주민안전 책임진다” (A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22>, 2025.4.29.. 검색)

### < 농어촌 군 환경·안전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환경안전<br>영역 | 빈집률    | 지역안전도        | 하수도보급률 | 주민 1인당<br>생활폐기물<br>처리량 |
|----|------------|--------|--------------|--------|------------------------|
| 1  | 전북 장수군     | 경북 울릉군 | 대구 군위군(공동1위) | 충북 증평군 | 강원 양양군                 |
| 2  | 전북 진안군     | 강원 양구군 | 전북 장수군(공동1위) | 전남 구례군 | 전남 진도군                 |
| 3  | 충북 보은군     | 경기 연천군 | 충북 보은군(공동1위) | 강원 양구군 | 충북 음성군                 |
| 4  | 전남 곡성군     | 전남 신안군 | 전북 임실군(공동1위) | 충북 옥천군 | 강원 고성군                 |
| 5  | 대구 군위군     | 경북 성주군 | 충남 청양군(공동1위) | 경남 거창군 | 강원 인제군                 |
| 6  | 충남 청양군     | 충북 괴산군 | 전북 진안군(공동1위) | 강원 고성군 | 경북 울진군                 |
| 7  | 전북 임실군     | 강원 화천군 | 전남 곡성군(공동1위) | 충북 진천군 | 경북 고령군                 |
| 8  | 전북 순창군     | 강원 철원군 | 전북 순창군(공동1위) | 전북 진안군 | 경북 칠곡군                 |
| 9  | 경북 고령군     | 전북 진안군 | 경북 고령군(공동2위) | 전북 완주군 | 충북 옥천군                 |
| 10 | 전남 구례군     | 전북 장수군 | 인천 용진군(공동2위) | 전북 장수군 | 인천 용진군                 |
| 11 | 충북 단양군     | 충북 옥천군 | 충북 단양군(공동2위) | 전남 함평군 | 강원 양구군                 |
| 12 | 충북 영동군     | 강원 인제군 | 경북 울릉군(공동2위) | 경남 하동군 | 충북 진천군                 |
| 13 | 전남 담양군     | 경남 함안군 | 충북 괴산군(공동2위) | 강원 양양군 | 경북 영덕군                 |
| 14 | 충북 괴산군     | 경북 칠곡군 | 경북 영양군(공동2위) | 전남 화순군 | 충북 단양군                 |
| 15 | 경남 하동군     | 충남 부여군 | 경북 청송군(공동2위) | 경남 남해군 | 경북 울릉군                 |
| 16 | 인천 용진군     | 전남 진도군 | 경남 합천군(공동2위) | 강원 평창군 | 강원 평창군                 |
| 17 | 전남 함평군     | 대구 군위군 | 전남 신안군(공동2위) | 강원 인제군 | 충북 괴산군                 |
| 18 | 경북 봉화군     | 강원 영월군 | 경북 봉화군(공동2위) | 전북 부안군 | 강원 영월군                 |
| 19 | 경북 영양군     | 충남 청양군 | 전남 함평군(공동2위) | 강원 정선군 | 전남 보성군                 |
| 20 | 전남 장흥군     | 경북 고령군 | 전남 담양군(공동2위) | 충북 영동군 | 대구 군위군                 |
| 21 | 전남 신안군     | 인천 용진군 | 경남 하동군(공동2위) | 경남 함양군 | 강원 홍천군                 |
| 22 | 강원 양구군     | 충북 영동군 | 경남 의령군(공동2위) | 충남 금산군 | 강원 화천군                 |
| 23 | 전북 무주군     | 전남 담양군 | 경남 산청군(공동2위) | 경남 창녕군 | 전남 무안군                 |
| 24 | 경남 의령군     | 전남 해남군 | 전남 구례군(공동2위) | 강원 철원군 | 경북 영양군                 |
| 25 | 경북 청송군     | 경북 봉화군 | 충북 영동군(공동2위) | 충북 보은군 | 전남 해남군                 |

주: 1) 지역안전도는 등급으로 진단하여 등급별 동점 석차가 다수 발생함

2) 지역안전도의 공동 2위는 총 20개 지역이며, 이 외에 전남 장흥군, 전북 무주군, 경북 의성군이 있음

□ (도농복합시) 경북 문경시,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 순으로 높은 순위

○ 경북 문경시와 전북 남원시는 ‘지역안전도’에서, 충남 계룡시는 ‘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에서 상위권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남 나주시, 충북 제천시 2곳

- 제천시는 전년 대비 지역안전도가 2등급((’22) 4등급 → (’23) 2등급) 올랐으며, 이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도농복합시 환경·안전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환경안전<br>영역 | 빈집률    | 지역안전도        | 하수도보급률  | 주민 1인당<br>생활계폐기물<br>처리량 |
|----|------------|--------|--------------|---------|-------------------------|
| 1  | 경북 문경시     | 경기 김포시 | 경북 문경시(공동1위) | 경남 양산시  | 경북 안동시                  |
| 2  | 충남 계룡시     | 경기 광주시 | 충남 보령시(공동1위) | 경북 구미시  | 경남 통영시                  |
| 3  | 전북 남원시     | 경기 파주시 | 전북 남원시(공동1위) | 전남 광양시  | 제주 서귀포시                 |
| 4  | 충남 보령시     | 강원 춘천시 | 전북 김제시(공동1위) | 울산 울주군  | 제주 제주시                  |
| 5  | 전남 나주시     | 경남 진주시 | 충남 계룡시(공동1위) | 부산 기장군  | 강원 삼척시                  |
| 6  | 전북 김제시     | 경기 이천시 | 전남 나주시(공동1위) | 충남 계룡시  | 경기 여주시                  |
| 7  | 경기 양주시     | 경기 안성시 | 경북 영주시(공동2위) | 경기 양주시  | 충남 논산시                  |
| 8  | 경기 여주시     | 부산 기장군 | 경기 양주시(공동2위) | 경기 광주시  | 경기 포천시                  |
| 9  | 충북 제천시     | 경기 포천시 | 충북 제천시(공동2위) | 전남 순천시  | 경북 영천시                  |
| 10 | 경북 영주시     | 경북 경산시 | 경기 여주시(공동2위) | 경기 파주시  | 경북 경주시                  |
| 11 | 충남 논산시     | 경남 양산시 | 충남 논산시(공동2위) | 강원 춘천시  | 전남 여수시                  |
| 12 | 경북 안동시     | 대구 달성군 | 충남 공주시(공동2위) | 경남 진주시  | 경기 이천시                  |
| 13 | 경북 영천시     | 울산 울주군 | 경북 영천시(공동2위) | 강원 원주시  | 충북 충주시                  |
| 14 | 경북 김천시     | 경북 구미시 | 경북 김천시(공동2위) | 제주 제주시  | 경북 문경시                  |
| 15 | 강원 삼척시     | 경북 영주시 | 경북 상주시(공동2위) | 제주 서귀포시 | 충남 보령시                  |

주: 1) 지역안전도는 등급으로 진단하여 등급별 동점 석차가 다수 발생함

2) 지역안전도의 공동 2위는 총 14개 지역이며, 이 외에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밀양시, 경북 안동시, 강원 삼척시가 있음

## 5 지역활력 영역

□ 인구 유지와 정주 기반의 접근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청년인구비율, 교통접근성)로 구성

- 농어촌 군 지역은 평균 21.96점, 도농복합시 49.08점이며, 도시형은 60.99점
- 지역별로 교통접근성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청년인구 비율\*\* 역시 12%p 이상 차이를 보이며 지역 활력 수준에서 편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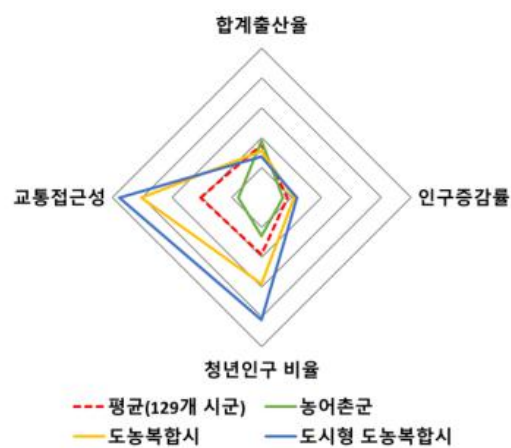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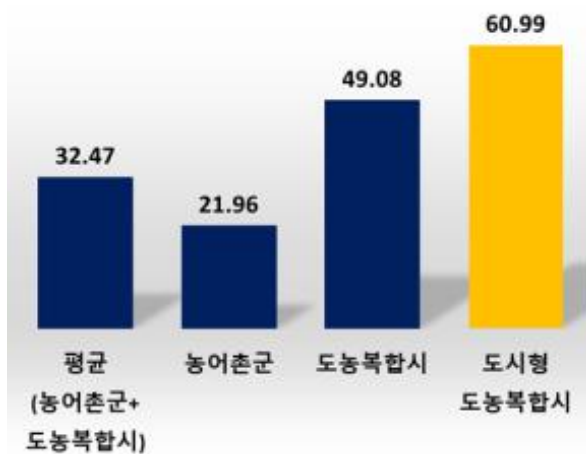
\* 교통접근성(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21.8분/45.7분 (최대) 88.2분/120분

\*\* 청년인구 비율(도농복합시/농어촌 군) (최소) 15%/10.6% (최대) 27.7%/25.1%

-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인구 증가 지역의 수는 줄었으며\*, 인구 감소 지역이 증가\*\*

\* (인구 증가) 농어촌 군 ('23) 51곳 → ('24) 40곳, 도농복합시 ('23) 46곳 → ('24) 42곳

\*\* (인구 감소) 농어촌 군 ('23) 28곳 → ('24) 35곳, 도농복합시 ('23) 3곳 → ('24) 4곳



□ (농어촌 군) 전북 완주군, 충북 증평군, 전남 무안군이 상위권

- 전북 완주군과 충북 증평군은 '인구증감률·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에서, 전남 무안군은 '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에서 우세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전남 장성군 2곳
  - 장성군 전년 대비 교통접근성이 5.1분('22) 96.1분 → ('23) 90.9분) 감소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 기록

**< 농어촌 군 지역활력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 순위 | 지역활력<br>영역 | 합계출산물  | 인구증감률  | 청년인구 비율 | 교통접근성  |
|----|------------|--------|--------|---------|--------|
| 1  | 전북 완주군     | 전남 영광군 | 전북 완주군 | 강원 인제군  | 충남 홍성군 |
| 2  | 충북 증평군     | 전남 강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화천군  | 전북 완주군 |
| 3  | 전남 무안군     | 경북 의성군 | 경북 울릉군 | 충북 증평군  | 충북 증평군 |
| 4  | 충남 홍성군     | 전남 해남군 | 충북 증평군 | 충북 진천군  | 전남 무안군 |
| 5  | 강원 인제군     | 강원 인제군 | 전남 영암군 | 강원 양구군  | 경북 칠곡군 |
| 6  | 충북 진천군     | 경북 청송군 | 충남 예산군 | 전남 무안군  | 전남 담양군 |
| 7  | 경기 연천군     | 전북 진안군 | 경북 의성군 | 강원 철원군  | 경기 양평군 |
| 8  | 경기 양평군     | 전북 임실군 | 경북 고령군 | 인천 옹진군  | 전남 화순군 |
| 9  | 강원 화천군     | 강원 양구군 | 충남 금산군 | 경기 연천군  | 경기 연천군 |
| 10 | 경북 칠곡군     | 강원 화천군 | 경기 가평군 | 전북 완주군  | 경남 함안군 |
| 11 | 강원 양구군     | 전남 장흥군 | 전북 순창군 | 경북 칠곡군  | 충남 부여군 |
| 12 | 전남 영암군     | 강원 철원군 | 충남 홍성군 | 충북 음성군  | 충남 예산군 |
| 13 | 충남 예산군     | 전남 함평군 | 충북 단양군 | 충남 홍성군  | 전남 영암군 |
| 14 | 강원 철원군     | 경북 예천군 | 강원 인제군 | 경기 가평군  | 충북 진천군 |
| 15 | 전남 화순군     | 경북 성주군 | 충남 청양군 | 강원 고성군  | 강원 양양군 |
| 16 | 전남 영광군     | 전남 신안군 | 강원 고성군 | 전남 화순군  | 경기 가평군 |
| 17 | 경기 가평군     | 전남 고흥군 | 경남 거창군 | 경북 울릉군  | 충북 옥천군 |
| 18 | 강원 고성군     | 전남 장성군 | 충북 진천군 | 전남 영광군  | 인천 강화군 |
| 19 | 전남 담양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무안군 | 강원 홍천군  | 강원 고성군 |
| 20 | 전남 장성군     | 전북 장수군 | 강원 양양군 | 전남 영암군  | 전남 장성군 |
| 21 | 경북 예천군     | 강원 홍천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울진군  | 충남 서천군 |
| 22 | 인천 옹진군     | 전남 보성군 | 강원 횡성군 | 경기 양평군  | 경남 고성군 |
| 23 | 충북 음성군     | 대구 군위군 | 전북 진안군 | 경남 거창군  | 경북 예천군 |
| 24 | 경북 울릉군     | 충북 증평군 | 경북 성주군 | 경북 예천군  | 충남 금산군 |
| 25 | 강원 양양군     | 경북 울진군 | 전북 무주군 | 전남 장성군  | 경북 고령군 |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기존 320만 평의 산업단지에 5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북 최대 규모 산단 집적화
- 산업단지를 주축으로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젊은 세대 유입

**[강원 화천군: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 입주자에게 5년간 월 임대료 90% 감면 혜택 제공 및 자녀 1명 출산 시 감면 기간 5년 자동 연장
- 정부의 주거·보육 통합지원 모델 마련과 연계하여 성공 사례 확산 검토

자료: “완주군 인구 10만명 돌파 카운트다운”,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50407580175>, 2025.4.29. 검색), “[기획] 맞춤형 주거 정책 통한 출생아 수 증기울 1위 지역 어디?”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707>, 2025.4.29.. 검색)

□ (도농복합시) 경기 양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아산시가 상위권

○ 경기 양주시는 ‘인구증감률’에서, 충남 아산시는 ‘인구증감률·청년 인구 비율’, 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감률·교통접근성’에서 우세

○ 상위 30%에 진입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2곳

- 양주시는 전년 대비 인구증감률이 6.5%p(‘22) 4% → (‘23) 10.5%) 늘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경기 양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마련]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과제 마련
- ①튼튼한 출산·양육 지원 및 돌봄 사회조성, ②일·가정 양립 및 가족 행복 증진, ③인구변화 적응과 사회 참여 확대, ④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 \* 경기 북부 시·군 중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인구 증가 추세(‘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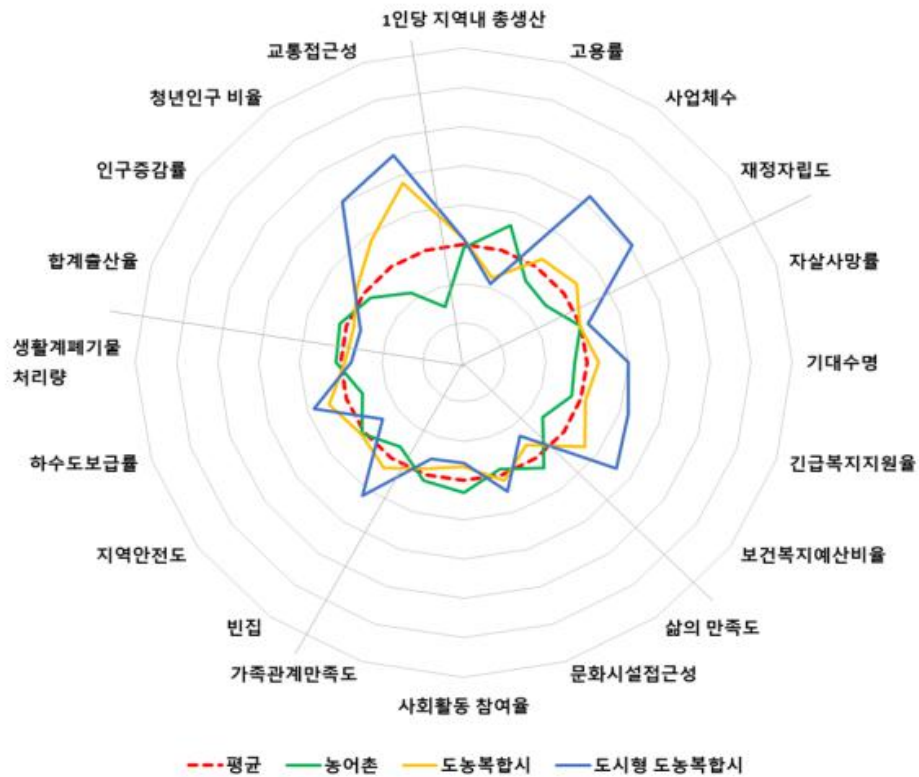
자료: 양주시청 언론보도(<https://www.yangju.go.kr>, 2025.5.1.. 검색), “양주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발표”(서울경제TV,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2280155#rs>, 2025.5.1. 검색)

#### < 도농복합시 지역활력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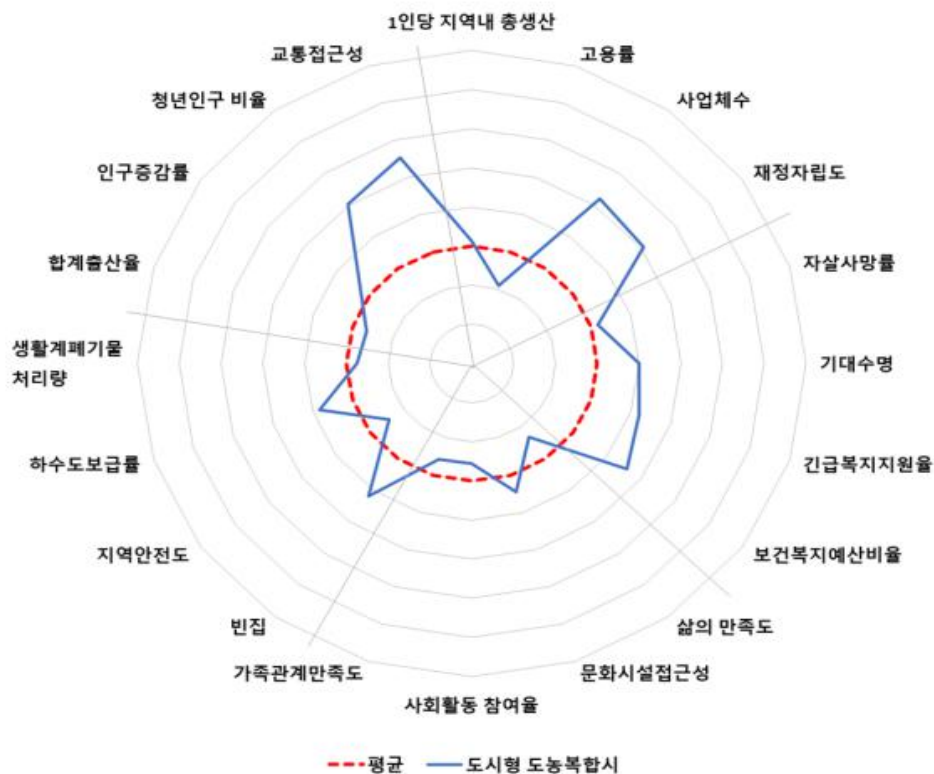
| 순위 | 지역활력<br>영역 | 합계출산율  | 인구증감률  | 청년인구 비율 | 교통접근성  |
|----|------------|--------|--------|---------|--------|
| 1  | 경기 양주시     | 전북 김제시 | 경기 양주시 | 경기 이천시  | 경기 김포시 |
| 2  | 충남 계룡시     | 강원 삼척시 | 충남 계룡시 | 경북 구미시  | 경남 진주시 |
| 3  | 충남 아산시     | 경북 영천시 | 충남 아산시 | 충남 아산시  | 강원 춘천시 |
| 4  | 경기 이천시     | 전남 나주시 | 경기 여주시 | 경기 파주시  | 부산 기장군 |
| 5  | 전남 광양시     | 경북 김천시 | 충남 당진시 | 강원 춘천시  | 경남 양산시 |
| 6  | 경북 구미시     | 대구 달성군 | 전남 광양시 | 경북 경산시  | 충남 계룡시 |
| 7  | 강원 춘천시     | 충남 당진시 | 경남 양산시 | 강원 원주시  | 전북 익산시 |
| 8  | 경북 경산시     | 충남 서산시 | 경북 영주시 | 경기 광주시  | 전남 순천시 |
| 9  | 경기 김포시     | 울산 울주군 | 강원 원주시 | 제주 제주시  | 전북 군산시 |
| 10 | 대구 달성군     | 전남 광양시 | 경북 경산시 | 경기 김포시  | 전남 여주시 |
| 11 | 전남 순천시     | 경북 상주시 | 충남 서산시 | 경기 양주시  | 충남 아산시 |
| 12 | 강원 원주시     | 충북 충주시 | 강원 춘천시 | 대구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 13 | 경기 파주시     | 경기 양주시 | 경남 사천시 | 전남 광양시  | 경기 파주시 |
| 14 | 경남 진주시     | 충북 제천시 | 충북 충주시 | 전남 순천시  | 경기 광주시 |
| 15 | 경남 양산시     | 경북 문경시 | 부산 기장군 | 경남 진주시  | 경남 통영시 |

##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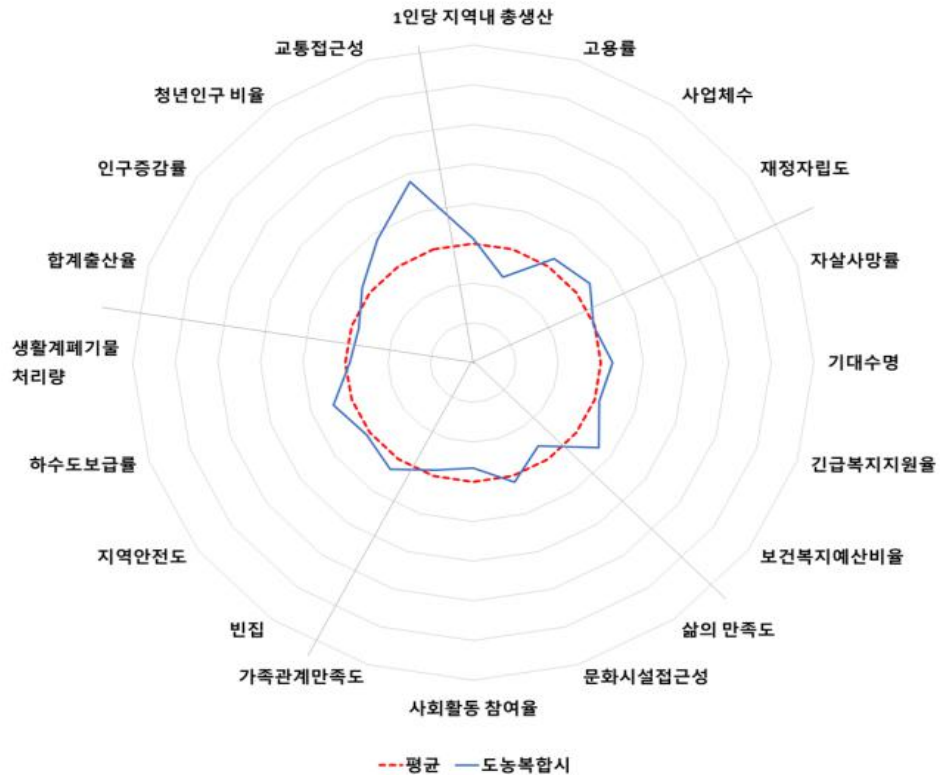
## 유형별 20개 지표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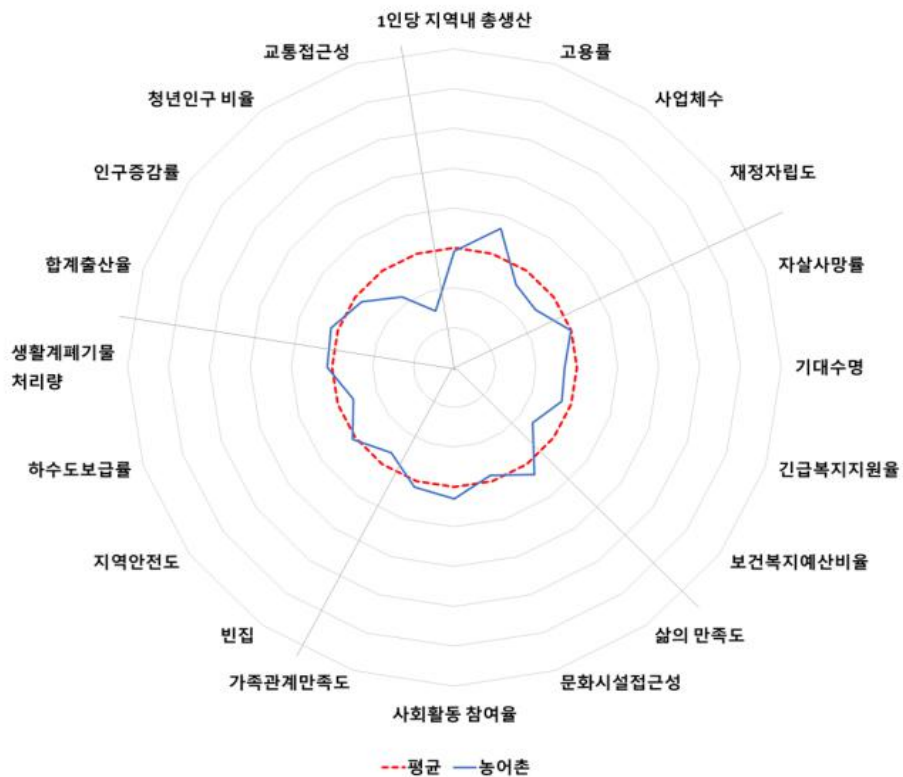
### < 유형별 지표별 분포 현황 >



### < 도시형 도농복합시 지표별 분포 현황 >



〈 도농복합시 지표별 분포 현황 〉



〈 농어촌 군 지표별 분포 현황 〉



---

# 경상지역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조치사항 보고

---

2025.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경상지역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조치사항 보고

### □ 추진배경

- 경북·경남·울산 일대 초대형 산불로 약 10만 4천ha 산림 소실, 인명 피해 183명, 산불 피해액 1조 818억 원 등 역대 최대규모 피해 발생
- 제1차 산림특별위원회 회의('25.4.15)에서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경상지역 산불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 □ 제1차 산림특별위원회 논의결과

- (지원한계) 피해보상범위의 사각지대, 현실과 괴리된 지원기준 등 현행법과 지원체계 미비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민 구제에 한계 발생
  - ① (농업) 트랙터·콤바인 등 11종 외 농기계(건조기, 경운기 등) 피해 지원 제외,
  - ② (임업) 일부 품목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미포함 및 실거래 가치가 아닌 묘목 기준 복구비 지급, ③ (어업) 양식장, 수조 등 주요 인프라 보험 가입률 저조로 보상체계 부실, ④ 산불진화인력 부족('23~'25 인력동일) 등 지적
- (특별법) 농림어업분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해 경상지역 산불피해 복구 특별법의 제정을 지지하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조치를 제안

### □ 위원회 조치 사항

- 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방안 마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5.1)

#### ■ 농어업위 관계부처 제안사항 ■

- ❖ 체계적인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농림어업 분야의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 ❖ 농림어가의 피해작물·농기계 등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집행으로 신속한 일상 복귀와 농산어촌 생활기반 정상화 적극 지원

- ❖ 산불피해 복구·예방 및 체계적 진화·관리를 위한 헬기, 임도확충, 장비 현대화, 전문인력 확대, 기술개발 등 적극 지원
- ❖ 긴급 대응을 넘어 장기적 생업 회복을 위한 체계 및 고령층·이재민의 심리적·공동체 회복 등 지역 재생을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구축

## □ 관계기관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25.4.24.)

- (위원)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활동기간) ~'25.10.31.
- 피해 지원·복구 경과 점검,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심사·처리 실시

### ○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 지원 종합대책 마련 발표(5.2, 관계부처 합동)

#### ■ 농림분야 중점 지원사항 ■

##### ① 농작물과 농업시설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을 상향

- 피해 극심 6개 농작물\* 8개 산림작물\*\*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 100% 현실화
- \*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 밤, 고사리, 조경수, 두릅, 호두, 약용류, 더덕, 뽕은감

##### ② 농기계 무상임대, 농작업 대행 및 일부 기종 할인판매(최대 40%) 등

##### ③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 확대 및 지원을 상향

| 구 분               |      | 현 기준   | 지원 상향·확대 | 비 고      |
|-------------------|------|--------|----------|----------|
| 농·임산물<br>대파대(代播代) | 현실화율 | 60~70% | 100%     | · 농작물 6종 |
|                   | 지원율  | 50%    | 100%     | · 임산물 8종 |
| 가축입식              | 지원율  | 50%    | 100%     |          |
| 농기계               | 지원율  | 35%    | 50%      |          |
| 농·축산 시설           | 지원율  | 35%    | 45%      |          |

⇒

#####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10백만 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 ○ (위원회) 특별법 제정 상황, 피해 복구 및 지원사항 모니터링

- 국회의 특별법 제정 및 산불관련 중앙부처 지원사항 등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원

## 참고 1

##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5.5.2)

□ 인명피해 : 183명(사망 27, 부상 156) ※ 공무원 1, 진화대원 3 미포함

□ 재산피해 :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 공공시설 5,643)

○ (사유시설) 주택 3,848동, 농·수산물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 (공공시설) 산림 약 104천ha,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769건

□ 복 구 비 : 총 1조 8,809억원(국비 1조 2,136, 지방비 6,673)

○ 시설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피해액       | 복 구 비     |           |         | 비 고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총 계  | 1,081,786 | 1,880,860 | 1,213,608 | 667,253 |     |
| 사유시설 | 517,473   | 495,393   | 346,792   | 148,601 |     |
| 공공시설 | 564,313   | 1,385,467 | 866,816   | 518,652 |     |

○ 지역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피해액       | 복 구 비     |           |         | 비 고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계       | 1,081,786 | 1,880,860 | 1,213,608 | 667,253 |         |
| 경북 의성   | 209,602   | 406,176   | 247,280   | 158,896 |         |
| 경북 안동   | 301,079   | 508,840   | 330,597   | 178,243 |         |
| 경북 청송   | 250,562   | 431,072   | 274,339   | 156,733 |         |
| 경북 영양   | 57,310    | 114,852   | 76,140    | 38,712  |         |
| 경북 영덕   | 231,926   | 370,044   | 252,588   | 117,456 |         |
| 경남 산청   | 21,664    | 31,316    | 20,061    | 11,255  |         |
| 경남 하동   | 7,063     | 7,288     | 4,251     | 3,037   |         |
| 울산 울주   | 2,542     | 8,849     | 7,118     | 1,731   |         |
| 그 외 지역  | 38        | 104       | 74        | 30      |         |
| 10개 시·도 | -         | 2,319     | 1,160     | 1,160   | 응원헬기 비용 |



---

#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추진상황

---

2025.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추진상황[요약]

- (추진배경)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5, 행안부)에 따라 총리 소속의 「삶의질위」를 대통령 소속의 「농어업위」로 통합 및 기능 이관 결정
  - \*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39%)를 폐지·통합하는 정비 방안
- (통합방향) 삶의질위 통합으로 농어업위와의 중복 논의 사항 최소화 및 삶의질위 사무국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성과 창출 기대
  - (위상)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다부처 정책 조정 기구 역할 수행
  - (역할) 시행계획에 대한 소관부처·지자체 등의 이행여부 및 효과성 관리
- (법안추진) 삶의질위-농어업위 통합 관련 법안은 제22대 국회 재추진 법안\*으로 발의(24.5.)되어 현재 상임위 소위에 회부
  - \* 위원회 정비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22.9.30) 됐으나, 국회 계류 중 임기 만료(제21대)로 폐기

### 정부(안) 주요 내용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삶의질위 기능 심의 근거(제2조) : '다른법령에서 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신설
  - 위원회 구성 인원(제3조) : 30명 이내 → 50명 이내, 당연직 위원 5명 → 16명
  - 위원회 기능(제2조, 제7조, 제12조) : 협의 → 협의·심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삶의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심의(제5조 및 제6조) : 삶의질위 → 농어업위 수정
  - 삶의질위 근거, 심의사항, 구성 및 임기 등(제10조) : 전체 삭제

-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 ① 위원수가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점, ②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는 현재 존속기한이 없으나 농어업위는 해당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29. 4. 24까지)이 있다는 점, ③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는 별도 사무국이 없으나 농어업위는 별도 사무국이 있어 농식품부와 농어업위 간 업무체계 조정 필요

- (향후계획)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법안의 개정상황 모니터링, 통합 대비 조직 및 예산 확대 방안 검토





## 목 차



|                           |    |
|---------------------------|----|
| I. 추진배경 .....             | 95 |
| II.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방향 ..... | 95 |
| III. 법안 개정 추진 상황 .....    | 96 |
| IV. 향후추진방향 .....          | 97 |



## I. 추진배경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5, 행안부)에 따라 총리 소속의 「삶의질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농어업위」로 통합 및 기능 이관 결정
  - \*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39%)를 폐지·통합하는 정비 방안
-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농어업위 중심으로 총리 소속의 삶의질위를 통합하여 다부처 관련 삶의질 정책의 총괄·심의 기능 강화

## II.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방향

- (위상)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다부처 조정 기구로 격상
  - 농어업위의 정책심의·조정기능 강화로 부처간 이해상충 이슈와 협조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추진력\* 확보
    - \* 기존 삶의질위가 실무위(농식품부) 중심으로 「삶의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발생하는 부처간 협의·조정 한계 및 이해당사자 공감대 미확보 등의 미비점 해소
  - 지방조직 위원회\*와 함께(정기 간담회 및 협의회 등) 삶의질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하여 현장체감형 삶의질 개선 성과 창출
    -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7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도 및 시·군·구 삶의질위원회를 운영
- (역할) 농어업위 의결 안건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를 활용하여 소관부처·지자체 등의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및 효과 분석 등 지속 관리
  - 농어촌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삶의질 지수\*\*를 결합한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농어촌 삶의질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 \* (삶의질위)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로 4대부문 19개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여부를 점검
    - \*\* (농어업위) 지역별 삶의질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5개영역 20개세부지표를 구성하여 농어업위에서 매년 지역별 삶의질 지수를 측정

- (운영) 농어업위 사무국이 삶의질위의 사무국을 대행, 다양한 부처·지자체·현장·전문가 등과의 실질적 협의·조정 활성화
  - 농어업위 산하 삶의질 분과위 신설(시행령 개정 필요)로 형식적 서면 회의를 벗어나 각계층의 포괄적인 의견 개진·수렴 창구로 활용
    - \* 삶의질위 회의는 최근 3년('21~'23년)간 연 1회 모두 서면회의 진행
  - 사무국내 지원조직을 확충, 삶의질위 산하 협의체\*의 운영 내실화
    - \* 실무위원회(연1회 개최), 교육·문화 분과위원회('21년이후 3회 개최), 보건·복지 분과위원회('22년이후 개최 실적 없음) 등

### Ⅲ. 법안 개정 추진 상황

#### 1 추진경과

- 삶의질위-농어업위 통합을 포함한 위원회 정비 법률안 정부발의('22.9.30.) 후 국회 계류 및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2.9.30, 정부)

- 주요 내용 : ① 농어업위 구성(현행: 30명 이내(정부당연직 5명) → 개정: 50명 이내(정부당연직 16명)), ② 농어업위 업무범위에 삶의질 기본계획 등 심의 추가
-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23.6.22)에서 농어업위 등 위원 증가에 따른 회의 진행의 어려움, 소통 통로 축소 등을 이유로 추후 재심의 결정 후 계류

- 농어업위에서는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를 위한 사전 검토 용역\* 실시
  - \* 「농어업위, 농어업인 삶의질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연구」('22.12월~'23.5월)
  - 위원회 통합 주요쟁점, 위원회 현황 진단결과, 국내·외 시사점 분석, 분과위 및 사무국 조직정비 등 세부방안 검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22대 국회 재추진 법안으로 발의('24.5.), 현재 상임위 소위 회부
-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 \* ① 위원수가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점, ②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는 현재 존속기한이 없으나 농어업위는 해당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29. 4. 24까지)이 있다는 점, ③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는 별도 사무국이 없으나 농어업위는 별도 사무국이 있어 농식품부와 농어업위 간 업무체계 조정 필요

## 2 법령 개정(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삶의질위 기능 심의 근거(제2조) : 다른법령에서 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신설
  - 위원회 구성 인원(제3조) : 30명 이내 → 50명 이내, 당연직 위원 5명→16명
  - 위원회 기능(제2조, 제7조, 제12조) : 협의 → 협의·심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삶의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심의(제5조 및 제6조) : 삶의질위 → 농어업위 수정
  - 삶의질위 근거, 심의사항, 구성 및 임기 등(제10조) : 전체 삭제

## IV. 향후 추진 방향

-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법안의 개정상황 모니터링
-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법안 통과 이후 위원회 통합 대비 사무국 조직 및 예산 확대 방안 검토

## 참고 1

##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관련 법령 개정 정부(안)

| 현 행                                                                                                                                                                                                                                                                                                                               | 개정안                                                                                                                                                                                                                                                   |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br>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br>② ————— 협의 또는 심의 ———.                                                                                                                                                                                                 |
|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br>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br>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br>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br>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br>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br>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br>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
| <신 설>                                                                                                                                                                                                                                                                                                                             | 8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br>② (생 략)<br>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br>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br>————— 50명 —————<br>—————.<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 2. (생 략)<br>④ (생 략)<br>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br>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                                                                                                                                                                                                                                   | 2. (현행과 같음)<br>④ (현행과 같음)<br>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 협의 또는 심의 ———<br>—————                                                                                                                                                                  |



| 현행                                                                                                                                                                                                                                                                                                                                                                                                                                                                                                                                               | 개정안                                                                                                                                                                                                                                                               |
|--------------------------------------------------------------------------------------------------------------------------------------------------------------------------------------------------------------------------------------------------------------------------------------------------------------------------------------------------------------------------------------------------------------------------------------------------------------------------------------------------------------------------------------------------|-------------------------------------------------------------------------------------------------------------------------------------------------------------------------------------------------------------------------------------------------------------------|
| <p>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 <p>-----</p> <p>-----</p> <p>-----.</p> <p>제12조(협의·심의 결과의 보고 등) ① -----</p> <p>- 협의 또는 심의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p>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본계획</p> <p>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p> <p>3. 해당 연도 시행계획</p> | <p>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p> <p>-----.</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p> <p>-----</p> <p>-----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

| 현 행                                                                                                                                                                                                                                                                                                                                                                                                                                                                                                                                                                                                                                                                                                                                                                                   | 개정안 |
|---------------------------------------------------------------------------------------------------------------------------------------------------------------------------------------------------------------------------------------------------------------------------------------------------------------------------------------------------------------------------------------------------------------------------------------------------------------------------------------------------------------------------------------------------------------------------------------------------------------------------------------------------------------------------------------------------------------------------------------------------------------------------------------|-----|
| <p><u>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u></p> <p><u>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u></p> <p><u>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p> <p><u>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u>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u></p> <p><u>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u>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u>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u></p> <p><u>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u></p> |     |

| 현 행                                                                                                                                       | 개정안 |
|-------------------------------------------------------------------------------------------------------------------------------------------|-----|
| <p><u>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참고 2

## 농어업위 및 삶의질위 운영현황

| 구분          | 농어업위                                                                                                                                                                                                                                            | 삶의질위원회                                                                                                                                                                                                                                                   |
|-------------|-------------------------------------------------------------------------------------------------------------------------------------------------------------------------------------------------------------------------------------------------|----------------------------------------------------------------------------------------------------------------------------------------------------------------------------------------------------------------------------------------------------------|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 설립          | 2019. 4. 25.                                                                                                                                                                                                                                    | 2004. 12. 8.                                                                                                                                                                                                                                             |
| 존속기한        | 존속기한 : 29.4.24<br>(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13조)                                                                                                                                                                                                           | -                                                                                                                                                                                                                                                        |
| 소속          | 대통령                                                                                                                                                                                                                                             | 국무총리                                                                                                                                                                                                                                                     |
| 성격          | 자문위원회(순수자문)                                                                                                                                                                                                                                     | 자문위원회(심의·조정)                                                                                                                                                                                                                                             |
| 사무국         | 있음                                                                                                                                                                                                                                              | 없음                                                                                                                                                                                                                                                       |
| 설치 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종합적 비전 제시와 관련부처 추진 정책의 총괄조정                                                                                                                                                                                               |
| 주요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 협의</li> <li>·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li> <li>·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대한 사항 협의</li> <li>·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 먹거리에 관한 사항 협의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 복지증진,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 총괄·조정</li> <li>·각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한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li> <li>·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농어촌특별 세财源의 배분기준 마련 및 구체적인 배분 등</li> </ul> |
| 예산          | 33억 8,800만원                                                                                                                                                                                                                                     | 10억 7,000만원                                                                                                                                                                                                                                              |
| 위원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 : 대통령의 위촉</li> <li>·위원 총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5명</li> <li>- 민간위원: 위원장, 농어업단체 12, 농어업분야전문가 12 등 25명</li> <li>- 위촉위원 임기 : 2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 : 국무총리</li> <li>·위원 총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16명</li> <li>- 민간위원 농어업단체 5, 산업계 4 등 9명</li> <li>- 위촉위원 임기 : 2년</li> </ul> </li> </ul>                    |
| 최근 3년간 회의실적 | 47회(출석 41, 서면 6)                                                                                                                                                                                                                                | 8회(출석 0, 서면 8)                                                                                                                                                                                                                                           |
| 주요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23.12.)</li> <li>·농어촌 삶의질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 결과 발표('24.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4회 수립</li> </ul>                                                                                                                                                                 |

---

# 의결안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성과

---

2025.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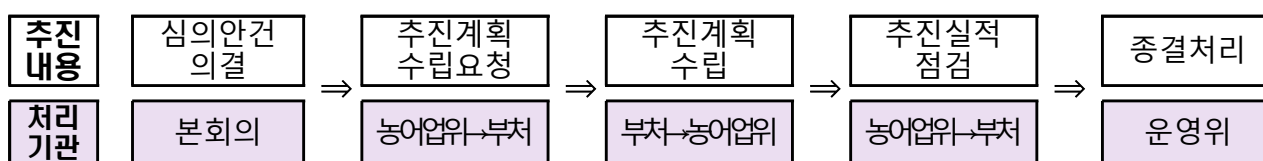
# 의결안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성과

## 1 전체 의결안건 현황

□ 위원회 전체 의결 안건은 52건으로, 그 중 37건은 종결처리 하고 15건은 추진실적 점검하는 중

○ 제1기~제2기('19년~'22년) 본회의 의결 안건은 모두 종결처리

### <의결사항 추진 체계>



## 2 제3기 본위원회 의결안건 현황 및 성과

□ (현황) 제3기 본위원회는 본회의(제17차~제24차)에서 총2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사무국은 의결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관리

| 구 분    | 계획수립요청 | 추진계획수립 | 추진실적점검 | 종결처리 | 합 계 |
|--------|--------|--------|--------|------|-----|
| 합 계(건) | 4      | 3      | 8      | 9    | 24  |

□ (성과) 의결된 안건은 관련부처의 제도개선, 예산확대, 사업 추진, 중장기 대책, 기술개발 등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

| 구분         | 안건명                              | 관계부처        | 주요성과                                                                                        |
|------------|----------------------------------|-------------|---------------------------------------------------------------------------------------------|
| 제도개선       | 기후·경제·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 제도 개선 | 산림청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7)                                                             |
|            | 농신보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 해수부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한도상향에 따른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상향('23.10)                                                |
|            | 소방차량적·식품·품질·안전·인증제 활성화 방안        | 해수부         | ○ 마른김(KS H 6025) 표준규격 개정 완료('24.12)                                                         |
|            | 플라스틱 조화사용 자제 권고                  | 지자체         | ○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표(경기도, 이천시, 거제시)                                                      |
| 예산확대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 산림청         | ○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등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사업 378억원 반영('23.11)                                                |
|            | 소방차량적·식품·품질·안전·인증제 활성화 방안        | 해수부         | ○ '25년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 예산 증액(378백만원 증)                                                          |
| 신규·시범 사업추진 |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 농식품부        | ○ 장립중벼 실증단지 조성 및 간척지 활용 생산기반 조성                                                             |
|            | 기후·경제·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 제도 개선 | 산림청         | ○ 지자체 산림계획 수립 시범사업 시행(5개지역)                                                                 |
|            | 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스마트 농어촌 실현 구축    | 농식품부<br>해수부 | ○ 복합 생활서비스 거점 시설 조성(1,043개소),<br>○ 어촌 스마트 생활서비스 시범사업 시행(경남 사천시 안도항, 충남 서산시 지곡 생활권 개소)       |
|            |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 산림청<br>해수부  |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23년 65개소, '24년 33개소)<br>○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진('25년, 귀산촌인 창업 및 주거지원 정책자금 지원('24년~) |

| 구분                | 안건명                                | 관계부처 | 주요성과                                                |
|-------------------|------------------------------------|------|-----------------------------------------------------|
| 중장기<br>대책수립       | 농업소득향상체계고도화및관련정책혁신방향               | 농식품부 | ○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방안 마련('24.10)                 |
|                   |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 농식품부 | ○ 농촌소멸대응 추진 전략 발표('24.3)                            |
| 용역 및<br>컨설팅<br>추진 |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br>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 농식품부 | ○ 농산업 정의 재정립 연구 및 농업인 관련(정의방식·기준·자격증빙 제도 등) 연구용역 추진 |
|                   |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 해수부  | ○ 어촌특화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추진('24.5~11.)                    |
|                   |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 강화 및 활용 방안        | 해수부  | ○ 해양수산데이터 분류체계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25.4)            |
|                   |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 농식품부 | ○ 신수요 쌀 육성방안 정책연구 용역 추진('25.5)                      |
| 기술개발              | 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 생태계 조성               | 해수부  | ○ 해조류 기반 대체수산물소재 및 배양육 생산 원천 기술 개발 착수               |
| 기 타               |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결의문            | 해수부  | ○ 정부비축 및 상생할인 사업 등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분위기 조성            |

-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실적 및 주요 이행성과를 정리하여 제3기 위원회 백서발간(6월말) 및 의결안건 이행점검 지속 관리



## 참고 1

## 제3기(2023~2025) 농어업위 의결안건 주요 이행실적·성과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1  | 2023-2호  | <b>제도개선</b><br>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br>'23.7, 제17차 본회의             | 2023      | ○ 사무부국장 폐지에 따른 후속정비 및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15명으로 확대를 반영한 운영세칙 일부개정('23.7.6)                                                                                                                                                                                                                                                                                | 사무국      | 종결<br>( '23.7)  |
| 2  | 2023-3호  | <b>기타</b><br>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br>'23.7, 제17차 본회의                    | 2023~2025 | ○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 계획 수립 요청('23.8)<br>○ 농식품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3.8)<br>○ 이행관리계획 수립('23.9)<br>-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 전환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br>○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3.12 ~)<br>- '25년 사회보장사업 관계기관 예산 협의 및 '26년 교육부 유보통합 도입시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 격차 해소 전망                                                                                                           | 농식품부     | 실적<br>점검        |
| 3  | 2023-4호  | <b>시범사업 제도개선</b><br>기후·경제·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br>'23.7, 제17차 본회의 | 2023~2024 | ○ 의결사항 통보 및 이행계획 수립 요청('23.8)<br>○ (산림청)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3.11)<br>- 지자체 중심 사유림을 위한 산림계획 법제화<br>- 사유림을 위한 산림경영 지원체계 마련<br>- 지역 내 목재이용 의무화 지원<br>○ 이행관리계획 수립('23.11.)<br>○ 운영위('24.9.) 보고 후 이행 종결<br>- 지자체 산림계획 수립 시범사업 시행(5개지역)<br>* 23년 실적 : 강원 2, 충남 1, 경남 2<br>- 춘천 선도 산림경영단지 생산 목재 춘천 목재협동조합(목재산업클러스터) 공급<b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7) | 산림청      | 종결<br>( '23.9)  |
| 4  | 2023-5호  | <b>기타</b><br>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br>'23.7, 제17차 본회의             | 2023~2024 | ○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23.8)<br>○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3.9 ~11)<br>○ 종결보고('23.12)<br>- 일일브리핑, 주니어 보드 운영, 정부비축 및 상생활인 사업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대응<br>-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적 대응 분위기 조성 성과                                                                                                                                                                              | 해수부      | 종결<br>( '23.12) |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5  | 2023-6호  | <div>제도개선 컨설팅추진</div> <b>농신보 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b><br>'23.9, 제18차 본회의    | 2023~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3.10)</li> <li>○ (해수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신보 기본재산 확대 방안</li> <li>- 정책사업 지원규모 증가 대응 보증한도 상향</li> <li>- 경영컨설팅 및 조사연구 체계 도입</li> <li>- 농신보 관리기관의 독립성 강화</li> <li>- 관리기관 이관(금융위→농식품부)</li> </ul> </li> <li>○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 수립('24.1)</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정책자금 한도 상향으로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23.10월)</li> <li>- 보증지원 업체 대상 컨설팅 280건</li> </ul> </li> </ul>                                                                                                                                                                                                                                                                                                                                                       | 해수부         | 실적 점검      |
| 6  | 2023-7호  | <div>사업추진</div> <b>일자리와 삶과 씬이 보장 되는 스마트농어촌 실현 구축</b><br>'23.9, 제18차 본회의 | 2023~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 요청('23.10)</li> <li>○ (농식품부, 해수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 확충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활성화, 데이터 기반 과학적 농업 확산</li> <li>- (해양수산부) '어촌 스마트 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워케이션 오피스 공간 조성 및 운영(전국 8개 시·도 12개 조성)</li> </ul> </li> <li>○ 이행관리계획 수립('23. 11)</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4.6~'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 ①복합 생활서비스 거점 시설 확대('23)930→('24)1,043개소), ②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 육성 및 스마트팜 시설원에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원예) 전년 대비 78% ↑, (축사) 전년 대비 19.4%↑)</li> <li>- (해수부) ①'어촌 스마트 생활서비스 시범사업 시행(경남 사천시 안도항, 충남 서산시 지곡 생활권 개소), ②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착공(3개소 신안, 강릉·양양, 포항) 및 준공(1개 부산), ③마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관광형 어촌(제주권) 및 도시형 어촌(수도권) 각 2개 마을 운영), ④강원지역 수산마을(강원 양양)을 선정 및 마을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24.7.)</li> </ul> </li> <li>○ 종결보고('25.3)</li> </ul> | 농식품부<br>해수부 | 종결 ('25.3) |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7  | 2023-8호  | <b>예산확대</b><br><b>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b><br>'23.9, 제18차 본회의              | 2023~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사항 통보 및 협조 요청('23.9)</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3.9 ~11)</li> <li>○ 종결보고('2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3.9)</li> <li>-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소관 예산안 증액 의결('23.11)</li> <li>*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 378억원</li> </ul> </li> </ul>                                                                                                                                                                                                                                                                                                                           | 산림청      | <b>종결</b><br>( '23.12) |
| 8  | 2023-9호  | <b>기술개발 사업추진</b><br><b>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 생태계 조성</b><br>'23.9, 제18차 본회의        | 2023~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 계획 수립 요청('23.10)</li> <li>○ 농식품부·해수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3.11)</li> <li>○ 이행관리계획 수립('2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푸드 국민인식도 제고, 블루푸드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커스트마이징 기술개발</li> </ul> </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3.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4,533억원 수산물 매출 달성 초중고 60개교 대상 우리수산물day 운영, 취약 계층 대상 수산물꾸러미 제공 (경북, 제주, 전남)</li> <li>- 미래 식품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해조류 기반 대체수산식품 소재 및 수산생물 유래 배양육 생산 원천기술 개발(1년차)</li> </ul> </li> </ul>                                                                                                                       | 해수부      | <b>실적<br/>점검</b>       |
| 9  | 2023-10호 | <b>연구용역</b><br><b>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b><br>'23.12, 제19차 본회의 | 2023~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4.1)</li> <li>○ (농식품부, 통계청) 의결사항 추진 계획 수립('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li> <li>- 농업범위 확대(수직농장, 푸드테크 등)</li> <li>- 청년·신규농인 등 인정 기준 마련</li> <li>- 농외소득 개념 재 확립</li> <li>- 농업인 사업자등록 활성화</li> <li>- 농업의 범위·분류체계 개선</li> </ul> </li> <li>○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 수립('24.7)</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농업에 대응한 농산업 정의 재정립 연구'를 통해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 개념 및 범위 등 검토(KREI, '24.6~12)</li> <li>- 농업인 정의 방식·기준·자격 증빙 제도 등 농업인 관련 전반적 사항에 관한 과제연구 진행(KREI, '24.8~'25.2)</li> </ul> </li> </ul> | 농식품부     | <b>실적<br/>점검</b>       |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10 | 2023-11호 | <b>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br/>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b><br>'23.12, 제19차 본회의 | 2023~<br>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4.1)</li> <li>○ (농식품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li> </ul> </li> <li>○ 의결사항 이행 관리계획 수립('24.3)</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소득·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 출범('24.6)</li> <li>- '한국형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24.10)</li> </ul> </li> <li>* 정책보험확대, 민·관 협업 산재적 수급관리 등</li> <li>- 직불 등 4조4천억 '25년 예산 반영</li> </ul>                                                                                                                                                                                                                                                                                                                                                                                                                | 농식품부               | 실적<br>점검       |
| 11 | 2023-12호 | <b>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br/>농산어촌 재생 방향</b><br>'23.12, 제19차 본회의    | 2023~<br>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 요청('23.12)</li> <li>○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 농산어촌 재생을 위해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li> <li>-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활성화 및 어촌 체험휴양마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어촌 빈집을 통한 다지역 거주 확대, 6차 산업과 연계한 아쿠아포닉스 시설 구축, 제3의 공간 만들기 사업</li> <li>- (산림청) 생활인구 저변 확대,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농촌·산촌·어촌다움 복원</li> </ul> </li> <li>○ 이행 관리계획 수립('24. 2)</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4.6~'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328)</li> <li>- (해수부) ①귀어귀촌 관련 종합정보 상담서비스(6,104건) 제공 및 귀어귀촌 브랜드 개발 등, ②어촌특화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추진('24.5.~11.) 및 특구 도입 방안 마련('25), ③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li> </ul> </li> <li>* 사업대상지 총 98개소 선정('23년 65, '24년 33개소) 및 유형별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li> <li>- (산림청) ①산촌명품화 사업 자원 확보 추진(지방소멸대응기금 등 '25년 10억 원) 및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진('25), ②귀산촌인의 창업 및 주거지원 정책자금 지원('24년~),</li> <li>○ 종결보고('25.3)</li> </ul> | 농식품부<br>해수부<br>산림청 | 종결<br>( '25.3) |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12 | 2024-1호  | <b>제도개선</b><br>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br>'24.3, 제20차 본회의                   | 2024      | ○ 미래산림특별위원회('24.3), 미래수산특별위원회('24.3), 세계개선특별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 운영('24.5)                                                                                                                                                                                                                                                                                                             | 사무국         | 종결<br>( '24.5) |
| 13 | 2024-2호  | <b>예산확대 제도개선</b><br>소비자 지향적 식품 품질 표시인증제 활성화 방안<br>'24.3, 제20차 본회의 | 2024~2025 | ○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 요청('24.5)<br>○ 농식품부·해수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4.6)<br>○ 이행 관리계획 수립('24.7)<br>- 한돈 소비 지향적 한돈 품질 인증 지표 및 기준 개발<br>- 마른김:①준비단계 (식품표시인증제 홍보), ② 도입단계 (마른김 품질기준 정비 추진), ③ 고도화단계 (“(가칭)식품표시인증협회” 설립 시 민간 식품표시인증업무 총괄 운영 검토)<br>○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4.8 ~)<br>- 한돈 품질인증 기준 지표의 적용 가능성 확인<br>- 마른김(KS H 6025) 표준규격 개정 완료('24.12)<br>- '25년도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예산 증액 (387백만원 증) | 농식품부<br>해수부 | 실적<br>점검       |
| 14 | 2024-3호  | <b>컨설팅추진</b><br>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강화 및 활용 방안<br>'24.3, 제20차 본회의     | 2024~2025 | ○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 요청('24.5)<br>○ 해수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4.5)<br>- 해양수산데이터 분류체계 분석 및 개선, 플랫폼 개편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br>○ 이행 관리계획 수립('24.6)<br>○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4.7 ~)<br>- 해양수산데이터 분류체계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25.4), 원천데이터 공개 지속 확대('24년 83종 신규개발)                                                                                                                                | 해수부         | 실적<br>점검       |
| 15 | 2024-4호  | <b>사업추진 연구용역</b><br>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br>'24.3, 제20차 본회의          | 2024~2025 | ○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4.3)<br>○ (농식품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4.5)<br>- 수출용 쌀 생산 전문단지 조성<br>- 생산비 절감 및 생산관리 전문화<br>- 쌀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br>○ 의결사항 이행 관리계획 수립('24.5)<br>○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5.1.)<br>- 장립종벼 실증단지 조성 및 간척지 활용 생산기반 조성<br>* ('24) 25.5ha → ('25~'27) 48.3ha<br>- 신수요 쌀 육성방안 정책연구 추진('25~'11)                                                                    | 농식품부        | 실적<br>점검       |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16 | 2024-6호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br>'24.12.18 제23차 본회의               | 2024~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5.2)</li> <li>○ (해수부·산림청)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연계 : 지자체 사업 공모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필요성 홍보 및 공감대 확산</li> <li>- (산림청) 산촌활력특화 사업연계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컨설팅 시 농산어촌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홍보</li> </ul> </li> </ul>               | 해수부<br>산림청  | 부처<br>계획<br>수립 |
| 17 | 2024-7호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br>'24.12, 제23차 본회의                 | 2024~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5.1)</li> <li>○ (농식품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li> <li>- 농지임대차 제도 개편</li> <li>- 농지의 세대 계승 촉진</li> </ul> </li> </ul>                                                                                        | 농식품부        | 부처<br>계획<br>수립 |
| 18 | 2024-8호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br>'24.12, 제23차 본회의                    | 2024~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5.1)</li> <li>○ (농식품부)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 (물적) 등록요건 상향</li> <li>- 농업경영체 차등화로 집중육성 대상 설정</li> <li>- 예비·은퇴 농업경영체 제도 도입</li> </ul> </li> </ul>                                                                   | 농식품부        | 부처<br>계획<br>수립 |
| 19 | 2024-9호  | <b>제도개선</b><br>플라스틱 조화사용 자제 권고<br>'24.12. 제23차 본회의     | 2024~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상 의결사항 알림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를 위한 협조요청('24.12)</li> <li>○ 의결사항 추진실적 점검('25.1.~5.) :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관련 지자체 조례 사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2, 이후 경기도, 인천시, 거제시(3곳)에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표 ('25.5. 기준 총 11곳 지자체 조례 실시)</li> </ul> </li> <li>○ 종결보고('25.5)</li> </ul> | 지자체         | 종결<br>( '25.5) |
| 20 | 2025-1호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br>'25.3. 제24차 본회의 | 2025~20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부처에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사항 추진계획 수립 요청('25.4)</li> </ul>                                                                                                                                                                                                                                                             | 농식품부        | 계획<br>요청       |
| 21 | 2025-2호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br>'25.3. 제24차 본회의             | 2025~20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 요청('25.4)</li> </ul>                                                                                                                                                                                                                                                                   | 농식품부<br>해수부 | 계획<br>요청       |
| 22 | 2025-3호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br>'25.3. 제24차 본회의                    | 2025~20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 요청('25.4)</li> </ul>                                                                                                                                                                                                                                                                   | 농식품부<br>해부수 | 계획<br>요청       |

| 순번 | 의결<br>번호 | 의 결 사 항                                                  | 추진<br>기간      | 추진 현황                                 | 관계<br>부처 | 진행<br>상황       |
|----|----------|----------------------------------------------------------|---------------|---------------------------------------|----------|----------------|
| 23 | 2025-4호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br>복지서비스 민간참여<br>확대방안<br>'25.3. 제24차 본회의    | 2025~<br>2026 | ○ 의결사항 이행부처 통보 및 추진계획<br>수립 요청('25.4) | 산림청      | 계획<br>요청       |
| 24 | 2025-5호  | <a href="#">제도개선</a><br>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br>'25.3. 제24차 본회의 | 2025          | ○ 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1년<br>연장('25.3)    | 사무국      | 종결<br>( '25.3) |

## 참고 2

## 농어업위 의결안건 목록(2019~2025.3.)

| 안 건 명 |                                             | 본 회의 의결     |
|-------|---------------------------------------------|-------------|
| 1     | 농협 선거제도 개선 방안                               | '19.9(제2차)  |
| 2     |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 '19.12(제3차) |
| 3     |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 '19.12(제3차) |
| 4     |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 '19.12(제3차) |
| 5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20.10(제6차) |
| 6     | 농어업 분야 청년세대 취·창업 활성화 방안                     | '20.10(제6차) |
| 7     | 농산어촌 발전의 신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              | '20.12(제7차) |
| 8     |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 '20.12(제7차) |
| 9     |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 방안                  | '20.12(제7차) |
| 10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 '20.12(제7차) |
| 11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 방안             | '20.12(제7차) |
| 12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 도입                  | '20.12(제7차) |
| 13    |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안                          | '21.2(제8차)  |
| 14    | 농협 조직·구조 제도개선 방안                            | '21.2(제8차)  |
| 15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 '21.2(제8차)  |
| 16    | 국가 식량 계획                                    | '21.2(제8차)  |
| 17    |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 '22.1(제12차) |
| 18    |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자금 증진 방안              | '22.1(제12차) |
| 19    |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 '22.1(제12차) |
| 20    |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 '22.1(제12차) |
| 21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분야 정책 방안                 | '22.2(제13차) |
| 22    | 농어촌형 돌봄센터 설립을 통한 농어촌 지역 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22.2(제13차) |
| 23    |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분야 에너지 전환 방안                | '22.2(제13차) |
| 24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                          | '22.2(제13차) |
| 25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 '22.2(제13차) |



| 안 건 명 |                                        | 본 회의 의 결     |
|-------|----------------------------------------|--------------|
| 26    |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방안                        | '22.3(제14차)  |
| 27    |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 '22.4(제15차)  |
| 28    | 농어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22.4(제15차)  |
| 29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23.7(제17차)  |
| 30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                      | '23.7(제17차)  |
| 31    |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 '23.7(제17차)  |
| 32    |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 '23.7(제17차)  |
| 33    | 농신보 역할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 '23.9(제18차)  |
| 34    | 일자리와 삶과 쉽이 보장되는 스마트농어촌 실현 구축           | '23.9(제18차)  |
| 35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 '23.9(제18차)  |
| 36    | 지속가능한 블루푸드 소비 생태계 조성                   | '23.9(제18차)  |
| 37    |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 '23.12(제19차) |
| 38    |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           | '23.12(제19차) |
| 39    |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 '23.12(제19차) |
| 40    |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 '24.3(제20차)  |
| 41    | 소비자 지향적 식품품질 표시 인증제 활성화 방안             | '24.3(제20차)  |
| 42    |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강화 및 활용방안              | '24.3(제20차)  |
| 43    |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안)                  | '24.3(제20차)  |
| 44    |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 '24.12(제23차) |
| 45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 '24.12(제23차) |
| 46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 '24.12(제23차) |
| 47    |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                       | '24.12(제23차) |
| 48    |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25.3(제24차)  |
| 49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 '25.3(제24차)  |
| 50    | 전통식품 품질인증 개선방안                         | '25.3(제24차)  |
| 51    |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 서비스 민간 참여 확대방안          | '25.3(제24차)  |
| 52    |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 '25.3(제24차)  |